

해양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전망과 과제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6시
국도호텔 튜올립홀

한국해로연구회 ·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 주최 컨퍼런스

해양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전망과 과제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국도호텔 3층 튜울립홀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 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Copyright © 2015 by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해양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전망과 과제”

ISBN 979-11-86226-43-8 9530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목차

회의 일정	5
참석자 약력	7
발표자료	15
제1부. 경성이슈 분야에서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17
경성이슈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19
해양 아시아(Maritime Asia)와 해양동북아평화협력 구상	29
제2부. 연성이슈 분야에서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53
동북아 지역해에서 동평구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55
동북아 해양재난 협력 방안: 후쿠시마 및 북서태평양 해양 방사능 대응을 중심으로	71

회의 일정

13:30-13:45	등 록	
13:45-14:00	환영사	백진현 한국해로연구회 회장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 교수
14:00-15:30	제 1 부 사회	경성이슈 분야에서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 교수
	발표	“경성이슈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해양 아시아(maritime Asia)와 해양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윤석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론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
15:30-15:50	휴식	
15:50-17:20	제 2 부 사회	연성이슈 분야에서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서향 한국해로연구회 운영위원
	발표	“동북아 지역해에서 동평구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동북아 해양재난 협력 방안: 후쿠시마 및 북서태평양 해양 방시능 대응을 중심으로” 정경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토론	윤영식 건양대학교 교수 구민교 서울대학교 교수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일본연구센터 소장; 연세대 국제대학원장
17:20-18:00	종합토론 및 폐회사 사회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참석자 약력

구민교

구민교 박사는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연구 및 교육 관심 분야는 동아시아 정치경제, 국제통상정책, 동아시아 영토분쟁 등이다. 구민교 박사는 동아시아의 여러 해양 분쟁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해양질서의 가능성을 모색한 *Island Disputes and Maritime Regime Building in East Asia: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New York: Springer, 2010)를 저술하였다. 그 밖에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Pacific Review*, *Pacific Affairs*, *European Journal of East Asia Studies*, *Global Asi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등 유수의 국제학술지에도 여러 논문을 게재해 왔다. 구민교 박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동 대학 행정대학원 졸업 후 미국 Johns Hopkins University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국제정치경제 석사를 취득하였고 2005년에 미국 UC Berkeley에서 동아시아 영토분쟁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구민교 박사는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국제문제연구소(CIS), 한국학 연구소(KSI), 및 국제관계학과(SIR)에서 박사후 연구원 및 전임강사(2005-2007년)로 근무하였으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2007-2010년)를 역임하였다.

박영준

박영준 교수는 현재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박영준 교수의 주요 연구분야는 일본정치외교, 동북아국제관계, 국제안보 등이며, 주요 저서(공저)로는 『해군의 탄생과 근대 일본』 (그물, 2014),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공저: 동아시아재단, 2014), 『21세기 국제안보의 도전과 과제』 (공저: 사회평론, 2012),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 (공저: 사회평론, 2011), 『제 3의 일본』 (한울, 2008) 등이 있다. 박영준 교수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이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일본 도쿄대학교(University of Tokyo)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영준 교수의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국제정치학회 안보국방분과위원장,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 U.S.-Japan 프로그램 초빙연구원,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 등이 있다.

백진현

백진현 박사는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법 교수로 재직중이며, 국제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2009년 3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으로 선출되었고, 2014년 7월 재선되어 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국제법과 국제기구, 해양법, 국제분쟁해결에 관한 전문가이며, 서울대학교를 졸업 한 후 Columbia Law School (LL.M.) 및 Cambridge University (Ph.D.)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경력으로 네덜란드의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미국의 Rand Corporation, Monica and Hoover Institution, Stanford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였으며, Johns Hopkins University의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의 초빙교수로, 독일의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 Heidelberg에서 방문학자로 활동하였다. 그가 국제해양법재판관으로 선출되기 전에는 UN 총회를 포함한 다양한 외교 무대에서 한국 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국내

에서는 Korean Council on the United Nations System (KACUNS), 한국해양연구원, 해성국제문제윤리연구소 등의 여러 학술단체를 이끌고 있으며, 최근 저서로는 Asian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and the Legacy of Colonialism (Routledge, 2012), Regions, Institutions and the Law of the Se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3) 등이 있다. 이외에 해양법, 국제법과 국제기구,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100여개가 넘는 국/영문 논문들을 저술하였다.

손열

손열 원장은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겸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교수, 도쿄대학, 와세다대학,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방문교수를 지냈다. 전공분야는 국제정치경제, 일본정치경제, 동아시아지역주의, 글로벌거버넌스이다. 현대일본학회장과 한일신시대 공동연구위원을 지내고,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립외교원 자문위원,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최근 연구업적으로는 “Attracting the Neighbors: Soft Power Competition in East Asia,” “Securitizing Trade: The Case of US-Korea FTA,” and “Japan’s New Regionalism: China threat, Universal Values, and the East Asian Community” 등이 있다. 손열 원장은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신범철

신범철 박사는 2013년 7월 외교부 정책기획관으로 취임하였다. 외교부에 오기 전에는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북한군사연구실장을 2012년부터 맡았고, 그 이전에는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을 2009년 이래 역임했다. 신 정책기획관은 18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자문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2011-2012)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대한국제법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 기획관은 「북한군 리포트」, 「국제법과 무력사용」 등 안보 및 국제법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저술활동을 하였다. 신 기획관은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를 2007년에 취득하였다.

양희철

양희철 박사는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며, 해양법 영역 중 특히 해양경계획정, 심해저제도, 동북아 해양분쟁, 극지법과 정책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양희철 박사는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해양정책: 한중일 대륙붕 외측한계획정의 이론과 전략(2009),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쟁점과 대응방안(2012), 중일 동중국해 자원개발 합의의 법적 해석(2012), 한중 황해 해양경계획정에서의 고려요소에 관한 연구(2012), 국가면제의 예외로서 국가의 비상무적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2012), 한중일 도서관리 법제(2013), 중국 ADIZ 의 국제법적 해석과 동북아 안보에서의 함의(2014), 조어대(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분쟁과 당사국간 법리 연구(2014) 등 해양법 및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분쟁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다. 양희철 박사는 국립대만대학교에서 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주제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양희철 박사는 국제해저기구 정부대표(법률자문)로 오랫동안 참여하고 있고, 국제법학회와 수로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등 대외 학술 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윤석준

윤석준 박사는 현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자 세종대학교 국방시스템 공학과 겸임교수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센터 겸임교수로 재직하였으며, 그 이전에 해군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복무하였다. 아울러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 학과장, 252편대 편대장, 신천지 함장, 원산함장 그리고 해군본부 정책처장, 전투발전2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 연구부장을 거쳤다. 1976년 해군사관학교 학사, 1986년 대만 국방대학교 푸싱캉 정치연구소 석사, 1992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이수하였으며, 주로 연구분야는 군사전략, 지역해양안보 및 중국 해양전략과 군사력 현대화로서 다수의 관련 국·영문 저술 및 논문을 발표하였다. 현재 한국해로연구회(SLOC Study Group Korea) 연구위원 및 국립외교원 자문위원이다.

윤영식

윤영식(예) 해군 준장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1981)하였으며, 해군에서 33년간 복무한 후 현재 건양대학교 군사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다. 주요 군사경력으로 전남함 함장, 국방부 기본정책과장, 해군사관학교 부교장 겸 생도대장, 국방부 운영개혁관 등을 역임하였다. 영국 ABERDEEN 대학에서 국제관계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저서로는 2014년-2015년 동아시아 해양안보정세 및 전망(2014), 일본해군의 전쟁범죄 이야기(2013), 제독들의 반란(2012) 등이 있다.

이동률

이동률 교수는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방문학자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 민족주의, 소수민족 문제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중국의 해양영유권 분쟁에 대한 전략과 요인”(2015), “중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의 목적과 제약”(2014), “시진핑체제 외교정책의 변화와 지속성”(2012), “China’s Policy and Influence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Denuclearization and/or Stab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2010), 《중국의 영토분쟁》(편, 2008) 등이 있다.

이상현

이상현 박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및 안보전략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2011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 구상을 담당했다. 한국국제관계연구소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동아시아연구원(EAI) 국가안보패널(NSP) 연구위원, 매일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통일부, 육군,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국제정치와 안보, 군사전략, 한미관계, 북한 문제를 주로 연구하며, 최근 논저로는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 배경, 구조, 전망”(2014),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2013),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비한 미국의 외교·군사 전략”(2013),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 구상을 위한 시론”(2013), 『한국의 외교안보 퍼즐』(2012, 공저), 『한미관계론』(2012, 공저), 『새로 그리는 동아시아 안보지도』(2011, 공저), 『변환시대 국가전략: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2011) 등이 있다.

이서항

이서항 박사는 현재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소장으로 재직중이며, 단국대학교 우석한국 영토연구소장 겸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연구 및 교육 관심 분야는 해양의 국제정치, 남·북극문제, 국제안보 갈등 등이다. 이서항 박사는 1989-2010 년 기간 외교안보 연구원(현 국립외교원) 교수 연구실장을 역임하면서 남극조약회의, 유엔 아태지역군축회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평가회의 등에 정부대표로 참가하고 2005-2006년에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협약(CCAMLR) 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이 박사의 논문은 “Korean Maritime Capacity Building” 등 100 여 편을 포함하며 Global Ocean Politics, 《북극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출간) 등 10 여 권의 저서를 공동 편집하였다. 이 박사는 서울 대학교 정치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후 미국 Kent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 했으며, 캐나다 Dalhousie 법과대학에서 Killam 기금 수혜자로서 박사 후 연구원을 지냈다. 이 박사는 한국해양연구원(2002-2010), 유엔체제학회(2005-2008), 아태안보협력 이사회 (CSCAP) 한국위 공동의장(2004-2010) 등을 지냈으며 주 몌바이 총영사(2010-2012) 를 역임하였다.

전재성

전재성 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일본 게이오 대학교 방문교수를 지낸 바 있다. 전공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동아시아 안보론, 한국외교정책 등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석사를 거쳐,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이론으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정치는 도덕적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현실주의>, 주요 논문로는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국제정치논총, 2009)”,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국제정치논총, 2010)”,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국의 전략 연구(안보문제연구, 2009)” 등이 있다.

정경태

정경태 박사는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방사능연구센터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현재 주 연구 분야는 복합순환-파랑-부유퇴적물 모델과 결합된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링과 해양방사능 물질의 해양생물 축적 예측 모델링을 포함한다. 정경태 박사는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 한국해양연구소 연구원으로 1986년 초까지 근무하였으며 1989년 호주 아델레이드 대학 응용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후 정경태 박사는 한국해양연구원에 근무하면서 해양환경보전연구부장을 역임하였으며, 대외적으로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초빙교수, 인하대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홍기훈

홍기훈 박사는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며, 해양환경 분야의 전문가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로부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 및 정책개발, 이산화탄소의 해양 거동 연구를 통한 기후변화연구에 주력하여 왔다. 홍기훈 원장은 플로니움-210 측정방법 개선(국제학술지 Applied Radiation and Isotopes, 2014), 대서양 플로니움-210 거동(Deep-Sea Research, 2013) 등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168건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수저 준설물

질 관리공법(2013), 기후지구공학적 사업의 관리규범(2011), 동아시아 환경변화(2002), 황해의 건강(1998) 등 20여권의 저서를 출간하고, 금속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 9건의 특허 등록도 보유하고 있다. 홍기훈 원장은 알래스크주립대학교 해양과학과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수저퇴적물 공학 기술개발을 위한 한국환경건설학회 회장, 폐기물투기를 포함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 합동과학그룹 회의 의장(2011년-현재)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해양환경보전 분야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참석자 약력은 가나다 순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발표자료

제1부

경성이슈 분야에서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경성이슈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상현, 세종연구소

I. 서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가치인 신뢰외교(trustpolitik)를 통해 국가들 간에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구상이다. 신뢰외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그리고 유라시아 협력 확대로 구성된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하 ‘동평구’)의 핵심 비전은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 안정의 초석을 다지고, 이를 통해 역내 주요국들 중심으로 다자간 대화와 협력의 관행 축적을 통한 신뢰구축으로 역내 평화와 협력의 문화 정착 및 역내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지향한다. 동평구는 역내 협력의 필요성은 높으나 정치적 이견의 소지는 적은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기후변화, 재난구호, 사이버스페이스, 초국가적 범죄 등 비전통 연성 안보의제 논의로 시작하여 향후 공감대 형성 시 전통안보로 협력의제를 확장한다는 방침 하에 추진되고 있다. 여권대 동평구는 연성안보 협력을 통한 동북아 다자협력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물론 과거에도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을 지향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노태우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의회 제안 이후 거의 예외 없이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을 증진시키고자 다자안보체제를 제안해 왔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10월 유엔에서 ‘동북아 평화협의회’(Consultative Conference for Peace in Northeast Asia) 창설을 제안했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5월 아세안지역포럼(ARF)과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동북아협력대화(NEACD) 등이 발족하는 추세에 힘입어 제1차 ARF 고위관리회의(SOM)에서 동북아 안보대화(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NEASED) 설립을 제안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1998.10), 한·중(1998.11), 한·러(1999.5) 정상회담에서 지속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 들어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번영의 동북아시아’ 구상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고, 출범 초부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추진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의 노력들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역내 다자체제 진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아시아 역내 각국의 정치·경제 체제가 상이하고 국가들간 문화적 이질감과 더불어 역사적 반목과 민족간 적대감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역사에 대한 기억과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과정에서 파생된 영토문제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셋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주도할 중재자가 없는 가운데 관련국간 보이지 않는 알력 및 주도권 다툼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구상들은 전통적 안보문제, 경성안보 이슈 혹은 경제 등에 초점을 맞춘 선언 위주, 정부 주도, 거대 담론 중심으로 출발해 제도화에 중점을 둔 반면, 동평구는 의제와 구성원뿐만 아니라 기능에 있어서도 개방성과 포괄성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동평구는 연성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다차원·다층적 접근이 특징적이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함에 있어서 기존 정부간 관계 중심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평구는 정부와 민간, ‘Top-down’방식(참여국 고위정책서클의 공감대)과 ‘Bottom-up’방식(실무 차원 및 민간의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멀티트랙 접근을 중시한다.

그동안 동평구에 대해서는 주변국들로부터 원론적 지지와 더불어 연성안보 위주의 접근법에 대해 한계를 지적하는 논의들이 많았다. 그러한 비판적 시각을 반영하여 동평구는 이제 접근방식과 어젠다를 좀 더 확대해야 할 시점에 왔다. 동평구는 원래 연성안보를 대상으로 협력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동북아의 안보 구도상 경성안보를 다루지 않고는 진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동평구의 확장적 발전을 위해 연성안보 위주의 기존 개념에서 경성안보로의 확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현황과 평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가치인 신뢰외교(trustpolitik)를 통해 국가들 간에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노력이다. 신뢰는 국가간의 협력을 위한 자산이자, 공공의 인프라이며,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내는 불가결의 요건이다. 신뢰외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그리고 유라시아 협력 확대로 구성된다. 신뢰외교가 한반도에 적용된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에 적용된 것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에 적용된 것이 유라시아 협력 확대, 나아가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된 것이 중견국 외교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그리고 유라시아 협력 확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동북아 국가들간 역내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이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추진을 통해 역내 국가들이 비전통 안보문제로부터 대화와 협력의 관습을 축적하여 신뢰를 쌓고 점진적으로 전통 안보문제로 협력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역내 다자간의 대화와 협력의 관습(convention) 축적을 통해 협력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평화와 협력의 문화(culture)를 정착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더불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북한을 포함한 역내의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처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병행 추진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가 선순환적 구조를 이루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즉,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의 상호작용은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에서의 신뢰 구축을 함께 견인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추진을 통한 동북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협력의 구축 노력은 유라시아 협력 확대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유라시아를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역내 공동의 위협요인이 되는 비전통 안보문제, 연성안보 이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긴급한 의제나 협력의 정치적 비용이 낮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의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는 재해·재난, 원자력안전, 환경, 보건, 에너지 안보, 사이버스페이스, 초국가적 범죄 등이 포함된다. 협력과정에서 참여국들의 관심 의제를 수렴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전통 안보문제, 경성안보 이슈, 즉 정치·군사적 안보 문제로 협력의제를 확장하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는 현재 동평구의 주안점은 국내·외 동북아평화협력 민관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하는 데 주어져 있다. 우선 국내 민관 네트워크 합동회의를 조직해 동평구 기능 분야별 협력 현황 파악 및 추진 목표 논의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발표 및 참석자들간 자유토론을 통해 상기 주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향후 국내 민관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국내 연구기관 및 해당 정부기관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1〉 국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협력 분야	외교부내 담당부서	정부내 관련조직	허브 민간연구기관	협력 주도국
원자력안전	국제에너지안보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
에너지 안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몽골/러시아
환경	기후변화환경과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
사이버스페이스	국제안보과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
보건	인권사회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국
마약		대검 마약과	미정	한국/중국
재난관리	다자협력·인도지원과	국민안전처	미정	일본

민관 네트워크 확장과 더불어 그동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평구 참여국들을 대상으로 민간연구기관, 정부 관련부처 등을 엮는 동평구 코어그룹(core group)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외교부는 트랙 1 차원의 동평구 네트워크 출범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추진해왔고, 민간 허브 기관들은 민간 차원의 동평구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를 진행해왔다. 2015년 10월 제2차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은 트랙 1 및 트랙 2 코어그룹이 모두 참여하여 향후 동북아 신뢰구축과 평화증진을 위한 액션플랜과 더불어 ‘동북아평화협력선언’(가칭)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14년 제1차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은 외교부 국립외교원 주최 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 제1차 포럼은 ‘평화와 협력의 동북아시아로 가는 길(Charting the Course to a Peaceful and Cooperative Northeast Asia)’이라는 대주제하에 에너지 안보, 원자력 안전, 사이버스페이스, 환경 및 재해·재난구호 등 4개 주제 분야를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제2차 포럼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평화협력의 새로운 지평으로의 출범(NAPCI: Launching into a New Horizon of Peace and Cooperation)’이라는 주제 하에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 재해·재난, 사이버안보, 보건 등 5~6개 주제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정부 측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안보수석의 지원과 외교부의 트랙 1 섭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본 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수 있고 참여국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구상에서 시그너처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고위정책결정자들의 가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10월 포럼에는 VIP 혹은 외교부장관, 국가안보실장 등의 참여 적극 요망된다. 더 나아가 주제 분야별 국내 국책·민간연구기관들이 소명을 갖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동평구 어젠다를 해당 연구기관의 우선과제로 지정하는 한편, 예산배정과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조치 요망된다.

동평구 출범 3년차를 맞는 지금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개념의 업그레이드를 고려하는 한편, 경성안보로 동평구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이론적 검토와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트랙 1.5 차원에서 동평구에 대한 개념적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 그 결과 현 시점에서 동평구에 대한 주요국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평구에 대한 주변국들의 비판적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정부는 왜 이 좋은 개념을 이행하는 데 소극적인가? 둘째,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면 동평구는 차기정부에서도 핵심 어젠다가 될 수 있는가? 셋째, 동평구에서 추진하려는 기능적 연성안보 위주의 협력이 동북아에 만연한 전통안보 분야의 갈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러한 비판을 감안한다면 박근혜 정부 3년차인 금년 하반기부터는 동평구 3.0 업그레이드 개념으로서 국내외 민간 네트워크 확대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평구는 향후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장관급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을 정례화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동평구 개념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여러 비판들을 수용하여 좀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III.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확장: 경성안보에 대한 고려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를 추동하는 큰 변수는 글로벌 차원 힘의 배분에서의 변화 양상과 그에서 파생되는 패권경쟁의 가시화이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 중국의 부상 지속, 러시아의 복귀,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정 등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주요 요인들이다. 그와 함께 최근 수년간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후퇴(retreat) 징후가 뚜렷한 추세를 이루고 있는데, 글로벌 리더십을 행사하려는 의지의 약화, 국제문제에서 대결을 회피하려는 소극성, 국내정치의 양극화로 인한 과감한 정책결정의 어려움 등이 이러한 징후를 촉진하는 원인이다. 이러한 강대국 관계 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불균형(imbalance)으로 인한 안보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 WMD 확산, 지역/글로벌 군비경쟁 및 군비의 고도화, 경제력과 국가 위상간의 괴리, 글로벌 거버넌스의 비효율로 인한 금융위기,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 등은 모두 이러한 불균형의 직·간접적 결과이다. 에너지/식량/수자원 등 새로운 전략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 이슬람국가(IS) 같은 새로운 비전통적 위협요인 등장, 사이버 안보 등도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들이다.

미국의 상대적 위축 이면에는 냉전 종식 이후 수립된 미국 주도의 단극적 질서를 변경하려는 현상타파(revisionist) 세력들의 등장이 있다. 최근 국제질서에서 중국, 이란, 러시아 등은 미국 주도의 단극적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려는 대표적 행위자들이다.¹ 향후 당분간 국제정세는 글로벌 차원과 지역차원 모두 주요국들이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혼란스런 패권경쟁 양상이

¹ Walter Russell Mead, "The Return of Geopolitics," *Foreign Affairs*, May/June 2014.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강대국관계에서의 경쟁과 긴장 증대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불안정과 전략적 유동성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강대국관계에서는 미일 대 중러, 일본 대 중국, 유럽 대 러시아 등 여러 가지 균열선의 존재로 인해 신냉전적 대결구도의 재등장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동북아만을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중관계의 전개와 중국의 주변지역 전략이 될 전망이다. 최근 들어 미국의 부활을 지적하는 분석들이 제기되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자신감이 실제 국제정치 질서에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 더구나 오바마 정부는 임기말로 접어들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오바마 정부 2015년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는 강한 자신감이 반영되면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리더십(strong and sustainable leadership)”을 강조하는 한편,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세계를 리드하겠다(“we will lead with purpose”)는 의지를 피력했다. 동 보고서는 미국의 리더십 때문에 지난 70년간 국제질서가 유지됐음을 지적하는 한편 씨퀘스터 종식도 강력히 시사했다.² 이러한 자신감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라크 전쟁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여러 각도에서 절대적, 상대적으로 약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경제력 회복은 이러한 절대적, 상대적 약화현상을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미국의 정체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정당정치의 양극화 현상은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서 대외적으로 ‘나머지의 부상 혹은 몰락(rise or fall of the rest)’과 상관없이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내적 합의의 창출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조건으로서 미국 정당정치의 양극화 현상의 완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아태 재균형 정책에 대한 의지와 공약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역내 국가들의 신뢰도 저하는 불가피하다. 혹은, 비록 미국이 의지와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미국의 능력과 자산이 부족함에 따라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책임과 역할 분담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미국은 부족한 부분을 동맹국들의 기여와 역할분담을 통해 보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동맹국들은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 우방국들이 국방과 안보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특히 국방예산 삭감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이 혼자 세계의 안보부담을 담당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미국은 동맹과 우방의 역할분담을 희망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 내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과 우방국들이 힘을 합쳐 안보문제에 대응하는 이른바 ‘연합방위(federated defense)’ 필요성이 제기된다. 근간 한일관계의 악화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모두에게 부정적 사태이다. 미국의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는 일차적으로 한국, 호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며, 다음으로는 미국과 안보협력 관계에 있는 파트너 국가들이다.

한편 중국은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을 위한 국력 결집에 주력하면서 대내적으로는 민생개선, 대외적으로는 중화민족의 부흥에 방점을 두고 시진핑 초기부터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외교안보 차원에서 국제관계의 민주화(i.e., 미국 독주체제 반대)와 다극화 등 중국외교의 새로운 정체성을 적극 추구할 전망이다. 중국이 제기하는 신형대국관계 요구는 미국 주도의 기존 국제질서에 도전하지 않고 순응하는 대신 중국의 핵심국가이익에 대한 상호존중 요구가 골자이다. 즉, 당분간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힘을 능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미국의

²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5*, February 2015.

불필요한 견제를 피하고 종합국력(comprehensive power) 배양에 필요한 시간을 벌자는 현실적 계산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주변지역 차원에서는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넘어 적극작위(積極作爲)로 불릴만큼 최근 들어 뚜렷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해상경제벨트, 육상과 해상의 새로운 실크로드 건설을 천명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CICA 등 다양한 정책이 분출하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을 결정하는 변수들은 여전히 전통외교, 경성안보 위주의 이슈들이다. 강대국 정치의 부활, 지정학적 이익의 각축이 지난 2~3년간 국제정치의 주된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연성안보 위주의 접근이 큰 효용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연성안보를 통한 경성안보로의 공감대 확대라는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장 동평구의 어젠다를 전통·경성안보 이슈로 확대할 수는 없지만 동평구의 ‘진화적’ 관점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태지역 해양에서의 ‘규칙기반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창출을 위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규칙기반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구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를 선도할 국제질서의 ‘규범과 원칙’을 같이 아태지역 국가들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개념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및 지역 차원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항행의 자유 보장 등 각 차원에서 제도(institution)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미국은 규칙기반 국제질서의 연장선상에서 아태 재균형 정책도 역내 모든 국가들이 함께 부상할 수 있는 여건과 규범을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아태 지역 및 대 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 아키텍처를 강화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함으로써 “함께 부상하자(working together, rising together)”는 것이 미국의 입장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남중국해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ISIS와의 투쟁도 결국은 미국 대 세계 간 ‘규칙기반 질서’를 누가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대결이다. 한국은 이러한 규칙기반 세계질서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에 동참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그 연장선상에서 정당화해야 한다. 한미 FTA 이행문제에 관한 미국의 불만도 결국은 한국이 규정을 안 지키는 인식 때문이며, 이는 다시 규범 만들기(rule-setting)의 문제로 귀결된다.

둘째, 해양에서의 규칙기반 국제질서에는 한중간 이어도 해양경계 획정 문제도 포함돼 있다. 이어도는 수심 4.6m의 수면아래 상시 잠겨있는 수중암초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섬’이 아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상시적으로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지형을 섬이라고 정의하면서 독자적인 영해와 EEZ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어도는 ‘섬’으로서 우리의 땅, 우리의 영토이며 해양경계획정시 기점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독도와 달리 해저지형의 일부인 수중암초로서 ‘영토’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EEZ, 우리의 대륙붕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어도를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들의 해양경계를 넓혀보려는 의도를 담은 주장에 불과하다. 중국정부도 이어도에 대해서 양국간에 ‘영토문제’는 없다는 점은 확인하고 있다. 이어도는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며 이는 본질적으로 해양경계획정의 문제인 것이다. 한중 양국이 선의와 협력의 정신 위에서 해양경계 획정 문제를 원만하게 타결지을 수 있다면, 이는 동북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신장에 중요한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셋째, 북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북한 및 북핵문제는 전통안보, 경성안보의 핵심적 사안인데,

동평구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북한의 대남도발 등 군사안보적 차원의 위협은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의 상호 보완적인 선순환적 발전을 추구한다.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North Korea question)는 남북한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익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상호 보완적이며 선순환적인 관계로 설정하여 동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즉, 북한문제 해결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역으로 동북아 지역국가들 간의 협력이 다양한 북한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한 동북아 국가들간의 협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국제화를 위한 디딤돌이다. 다시 말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해 북한문제 주요 당사국들 간의 이해와 협력의 기반을 만들고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한국의 북핵정책은 현재 미국과 함께 '전략적 인내' 노선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6자회담은 공전 상태이고, 회담을 새롭게 재개할 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전략적 인내가 장기간 공전되면서 전략적 방기, 혹은 전략적 무시로 변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략적 인내의 대안은 있는가? 오바마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현행 '전략적 인내'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시간이 흐를수록 비핵화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텐데, 한국 주도의 남북관계 개선 이니셔티브는 무엇인가? 그리고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을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와 국회의장 회담을 제안한 것도 크게 보면 북한을 인계이지하기 위한 방책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동평구도 궁극적인 단계에서는 북한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대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초청을 거부했다. 정부는 20일 북한이 우리측이 제안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과 9월 서울안보대화 초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의장 회담 제안이나 서울안보대화 초청에 대해 거부한 점, 이것은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를 폄하하고 이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우리측이 제의한 여러 가지 남북대화에 호응하면서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전날 서기국 성명에서 남측의 국회의장 회담 제안과 서울안보대화 초청에 대해 "남북대화를 추악한 정치적 농락물로 이용하려는 남한의 음흉한 기도"라고 비난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제안하면서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북측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 국방부도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4회 서울안보대화(SDD)에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급 인사를 초청하는 통지문을 북한측에 보낸 바 있다.³

넷째,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시각에서 정치 및 군사적 신뢰구축의 점진적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미·중 및 중·일간 갈등과 대립 심화, △중국 및 일본의 적극적인 현상변경 추구, △영토·영해 갈등의 표면화와 확산, △과거사와 관련한 갈등 심화 및 민족주의 성향 강화 등의 부정적 현상이 발생, 심화됨에 따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에 정치·군사적 제약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역으로 이러한 갈등양상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필요성을 더욱

³ 『연합뉴스』, 2015.07.20.

부각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연성안보 문제와 더불어 정치·군사문제들을 해결하고 완화하는데 것에도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배타적으로 연성안보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치·군사적 신뢰문제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의제화하는 조화로운 접근을 추구한다. 다만 연성안보 문제에 좀 더 무게를 두되 연성안보 이슈와 경성안보 이슈를 선순환적 관계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동평구는 바람직한 동북아 안보구도와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다자간 정치안보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역내 평화협력의 규범 마련을 위한 고위급 대화체(차관급 이상)를 도입하여 관련국들간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확대하고 나아가 행동규범(code of conduct) 또는 원칙(principles)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병행하여 군사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긴장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도입하고자 함. 현재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에 대해 제안이나 논의가 없음에 따라 이를 논의할 수 있는 논의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여기서 군사적 개방성(openness)과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고자 한다. 정치 및 군사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어 온 국제기구 혹은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치·군사 신뢰방안을 만들고자 한다. 더불어 정치·안보문제에 관한 당국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대화를 활성화 하고, 안보분야 주요 국제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제연구기관간 다자대화 설치를 추진하는 데도 중점을 둔다.

현재 아태지역 전통안보를 다루는 몇 가지 포럼이 있다. 대표적인 것은 싱가포르에서 매년 개최되는 상그릴라 안보대화를 들 수 있다. 이번 상그릴라 안보대화의 세 가지 큰 화두는 첫째, 남중국해 문제, 특히 중국의 대규모 간척사업(land reclamation)이 제기하는 미중간 긴장의 제고를 들 수 있다. 문제는 중국뿐 아니라 아세안 다른 국가들도 간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는 결국 남중국해의 긴장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구속력 있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이 조속히 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둘째, 규칙기반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확립 필요성이다. 역내 국가들은 국제법과 규범, 절차에 따라 국익을 추구해야 하며, 무력에 의한 현상의 변개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항행, 영공통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역내 다자적 안보협력 필요성이다. 아시아에서도 다양한 비전통, 초국가적 안보이슈가 빈발하는 추세이다. 비전통 안보문제는 한 나라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고 다자적 안보협력 외에는 대안이 없다. 신뢰구축도 중요하다. 비록 신뢰가 전쟁을 막지는 못하지만 오판이나 착오에 의한 돌발사태, 갈등, 분쟁 가능성을 줄여준다. 아태지역 국방장관들이 대거 참석하는 상그릴라 안보대화는 역내의 본격적인 전통안보 대화의 장이지만 문제의 성격상 해결을 위한 자리는 아니다. 다만 전통안보 문제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을 개진하고 이를 통해 안보논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파국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이 있다. 이번 상그릴라 대화에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됐듯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참모총장 간에 남중국해 상황을 둘러싸고 열띤 설전이 있었다. 카터 장관이 중국이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한다고 비판하자 쑨 부참모총장은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스프레틀리) 군도에 조성하고 있는 인공섬의 군사적 활용성을 강조하면서, 인공섬 건설이 “해상수색구조, 재난구호, 과학연구 같은 공공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 논란의 결론은 아무것도 없지만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역내 국가들이 문제의 현황과 성격을 이해하는데는 분명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역내 안보대화 메커니즘으로 몽고의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울란바토르 안보대화(Ulaanbaatar Dialogue)를 들 수 있다. 울란바토르 대화는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특이한 형태의 포럼이다. UB 대화는 2013년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민주주의 공동체’ 7차 각료회의에서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울란바토르 대화’를 처음 제안했다. 취지는 지역국가들이 울란바토르에서 모여 당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몽골이 공헌할 여지가 있는 것은 몽골의 한반도에 대한 외교 원칙 때문이다. 첫째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하는 것, 둘째 북한을 대화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몽골이 북한-일본간 또는 북한-미국간 양자 실무자 접촉이 울란바토르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면서 동북아 긴장을 낮추기 위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에 개최된 2차 UB 대화에서는 동북아의 현 상황에서 경성안보 문제를 앞세우면 대화의 진전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고, 그래서 연성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대화와 접촉, 협력의 분위기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세기에 들어 초국가적 정책커뮤니티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했고, 정책네트워크의 역량도 과거에 비해 크게 신장했다. 그 결과 동북아 국가들의 전문가 집단이 상호 네트워크화하여 연대한다면 정책적 임팩트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특히 몽고와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 때문이다. 동평구는 궁극적으로 북한도 끌어들이 동북아의 블랙홀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끌어내는데 목적이 있다. 다행히 북한과 몽고의 관계는 한국이나 중국과 비해 그마나 나은 편이다. 몽고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건설적 기여를 해준다면 이는 한국으로서도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동 회의에 참석한 브루킹스연구소의 카프라라(David Caprara) 박사는 한반도 문제에서 몽고의 중재자 역할을 주목했다. 한반도가 냉전의 동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몽고의 역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몽고는 북한과의 양자관계에서 건설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6자회담이 이미 기능을 상실한 가운데 몽고는 독특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UB Dialogue의 대화와 신뢰구축은 한신프, 동평구와 조화를 이루는 구상이며 서로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 UB dialogue와 함께 지역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IV. 맺는 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만일 실행만 된다면 갈등관계에 있는 양자관계를 완화·해소하고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중·일, 미·중 등 양자관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과 진전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해 역내 국가들간 공통의 도전과 문제에 대한 다자간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협력의 기회와 기초를 강화하고 신뢰를 증진하여 양자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배양은 양자 갈등을 예방하고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양자간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협력이 약화되고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해 다자협력과 대화를 추진하여 지역정체성을 마련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전략이다. 즉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해 지역 구성원들간에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인식을 형성·확산하여 양자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면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평구는 아직 동아태지역의 본격적인 안보 협의 메커니즘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의 발전 잠재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제는 동평구에 대한 역내 공감대와 필요성, 그리고 가시적인 추진의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으면 추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이제는 동북아 차원을 넘어서는 대전략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 동북아라는 한정된 지평을 넘고, 양자전략을 넘어선 지역의 미래에 대한 한국의 비전을 제시할 때가 된 것이다. 한국은 이제 강대국 세력정치의 극복과 동시에 다른 국가들도 동의할 수 있는 지역전략 개념을 주창하여 지역 중견국으로 부상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한국이 지역 중견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 수단이 필요하다. 특히 전작권 전환 대비 국방개혁의 필요성, 한국 방위에 대한 책임감 제고,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필수적이다.

한국은 향후 다양한 기회와 도전요인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은 강점과 동시에 약점에 직면할 전망이다. 상황을 자세히 보면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이익의 격돌에 집중하는 상황은 불가피하게 지역하부(sub-regional) 차원에 대한 관심과 이익을 약화시켜 한국과 같이 지역적, 국가적 어젠다가 중요한 국가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가능성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히 필요한 것은 창의적 접근과 대담한 리더십(bold leadership)이다. 현재의 여건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중견국 외교의 역량이 크게 강화된 만큼 역내 다자안보협력을 새롭게 시도해볼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된다. 최근 역내 국가들 간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심각하며, 역내 갈등이 군사력 충돌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적절한 협력도구가 가동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의 위상이나 국제적 역량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도 한국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취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해양 아시아(Maritime Asia)와 동북아 해양평화협력 구상

윤석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I. 문제 제기

동아시아 안보의 주요 매개체는 ‘해양’이며, ‘아시아 부상(Asia’s Rise)’의 근원이다. 대륙국가 중국의 쇠퇴는 해양국가 미국에게 동북아시아(이후 ‘동북아’)와 동남아시아(이후 ‘동남아’) 해양,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에서의 해양통제(sea control)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들 해양에서 강대국 간 경쟁, 영토, 역사, 에너지, 환경, 해적 및 이념 대결 등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각각 달라 역내 국가들과의 대결국면이 생산되고 있다. 해양강국(Maritime Power)을 선언한 중국이 미국 해양통제권에 도전함으로써 해양에서의 각종 갈등과 무질서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내 국가들이 이례적으로 해양지향적 국가정책과 군사전략을 지향하는 ‘해양 아시아(Maritime Asia)’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양을 통해 동아시아 무역 증대와 경제성장을 이룬 주된 매개체인 해양에서 갈등과 대결이 증대되는 현상으로 귀결되고 있다.

우선 동남아의 경우 해양영유권 분쟁, 해적 위협 증대 그리고 강대국 해양경쟁 등의 다양한 위협이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역내 해상물류의 주요 매개 해양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적이 증가되는 추세¹를 보이는 가운데 남중국해 해양영유권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을 지향하여 역내 관련 국가와 인접국 간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 인도양의 경우, 아덴만 해적퇴치작전에 참가한 중국 해군의 인도양 진출에 따라 인도양에서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노정되어 인도, 중국 그리고 미국 간 거대 전략적 삼각관계(Great Strategic Triangle)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까지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동북아의 경우 한반도 주변 해양을 중심으로 활발한 해상교역과 협력이 유지되나, 북한의 해양 군사도발로 극한 긴장국면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 해양은 세계 수위의 해군력이 전개된 긴장의 해양임에도 불구하고 상호신뢰 구축과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레짐과 메커니즘이 부재된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구상(One Belt, One Road Initiative)’정책화와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로 동북아 해양을 동남아 해양과 유라시아 대륙 간 연계시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2014년에 우리 외교부가 소위 연성안보² 현안을 중심으로 동북아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 구축의 핵심으로 강조하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Northeast Asia Peace Cooperation Initiative: NAPCI: 이후 ‘동평구’)'을 단행본으로 발간하고, 2015년에 ‘동평구 2015’로 개정하여 다시

¹ 최근 소말리아 근해 해적발생은 거의 전무하나, 동남아시아 해양에서는 전반기에만 약 40 회로 기록되는 해적행위가 발생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² 이에 대한 정의는 정확히 없다. Joseph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참조.

발간하였다.³ 특히 동평구 2015에서는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 사이버페이스, 보건, 마약 그리고 재난관리의 7개 추진분야를 제시하고 있다.⁴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기관으로부터 동평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동북아 해양평화협력 구상(이후 ‘동해평구’)을 제시하여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⁵ 기본적으로 동해평구는 동평구 2015 7개 추진과제 해양을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해양을 근간으로 국·내외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해양 아시아 시도가 동북아로 확산되는 추세 하에서 동해평구는 해양협력을 통해 ‘아시아 패러독스’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실질적 과제일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해양 아시아로 지칭되는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해양 중심의 국가정책과 군사전략 양상과 추세를 살핀다. 다음으로 이를 동북아에 적용시키고 동평구 개념과 과제를 식별해 본다. 끝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와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계시킨 동해평구 개념이 어떤 목표, 방향, 방법과 수단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향후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가를 결론으로 제시한다.

II. 해양 아시아의 근원: 해양국가 미국과 대륙 국가 중국 간의 대결

해양 아시아 추세는 미국과 중국 간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강대국 경쟁’ 국면을 주요 동인(動因)으로 파생되었다. 특히 대륙국가 중국의 해양강국 선언과 일대일로 구상 제시가 역내 국가들에게 기회이자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해양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각종 노력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양면성(兩面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협력 보다는 갈등이 지배적이다. 일부는 이를 ‘해양 관리 능력 경쟁’ 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⁶

1. 미국 해양전략 개정

우선 미국의 동아시아 해양전략 변화이다. 전통적 함대 결전을 전제로 하던 1997년 해양전략(Maritime Strategy 1997)에 이어 2007년에 미국 해군, 해병대 그리고 해안경비대가 공동으로 서명한 ‘21세기 해양력 지향을 위한 협력전략(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of Sea Power)(일명 ‘2007 해양전략’ 또는 ‘CS-21)’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Law of the Sea: UNCLOS) 발효와 해상에서의 ‘전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주로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다자간 협력에 의거 대응하는 소극적이며 방어적 개념이었다. 실제

³ 외교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2015』 (서울: 외교부, 2015) 참조.

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2014은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및 환경의 3 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외교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아시아 패러독스를 넘어 평화협력의 동북아로』 (서울: 외교부, 2014) 참조.

⁵ 예를 들면 2015년 4월 2일에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산호홀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간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동북아 해양평화협력구상 전문가 토론회』 발표논문 참조.

⁶ 이는 미국 CNA 선임연구원 RADM Michael McDevitt, USN retired 에 제기된 논리이다.

이는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부터 시작된 대(對)테러전쟁⁷, 2003년 이라크와 아프간에 지상군 투입, 2012년 조지아 사태와 2013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미국의 ‘유럽 중시 전략’ 채택에 따른 영향이기도 하였다.

최근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해양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그 동안 ‘2007년 해양전략이 너무 포괄적이며, 방어적이어서 증대되는 중국의 해양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는 비난이 있었는데, 2015년 3월에 미국 해군, 해병대 그리고 해안경비대 간 공동으로 발표된 개정판 ‘21세기를 지향하는 협력전략: 전방전개, 개입 그리고 준비, 2015(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of Sea Power: Forward, Engaged, Ready, Revised)(일명 ‘2015 해양전략’ 또는 ‘CS-21R)’으로 다시 문서화되었다. 개정판은 중국 해군력 증강과 해양팽창 정책을 개정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중국 해군력 증강과 역내 해양 팽창을 보다 명확한 주적(主敵) 개념으로 언급하였다.⁸ 또한 7월 8일 발표된 미국의 『국가군사전략(National Military Strategy)』에서 미국 주도의 ‘법에 기반을 둔 세계질서와 구도(rule-based order)’에 도전하는 중국을 ‘일부 국가(some states)’로 기술하면서 공해상 자유로운 항해의 권리를 보장하는 ‘전 지구적 공통’을 지향하는 미국과의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 증진을 주문하고 있는 등 본격적으로 중국의 해양팽창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⁹

사실 그 동안 2007년 해양전략은 2011년 미국 국방비 자동삭감 조치, 2011년 발표된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전략(US pivot to Asia strategy)와 이어 수정된 군사력 재균형 전략(US military re-balancing to Asia strategy) 등과 같이 애매모호한 내용들과 같이 혼재되어 적용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역내 해군력 증강을 미국 해공군력의 약 60% 동아시아 재배치 등과 같은 수적 약속과 해양으로 팽창하는 중국과의 협력 증진 간 모순이었다. 그러나 2015년 해양전략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방전개, 개입 그리고 전투준비 등의 적극적 전략 개념을 제시하면서, 동맹국 또는 파트너십 관계 증진, 해상, 수중 및 공중 그리고 전자기 공간(electromagnetic spectrum)을 모두 활용하여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에 대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중국이 동중국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따른 현상유지(status quo) 타파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해상 자유로운 항해의 권리 보장과 같은 ‘선언적 우려’보다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군사지휘관과 의회의 우려가 반영된 조치였다.

구체적으로 2015년 5월에 들어 미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첨단 연안전투함(LCS)의 최초 경비작전을 실시하고 첨단 해상초계기 P-8A의 중국 영유권 주장 도서 12마일 이내에 초계비행을 실시하며 이례적으로 일부 언론사(CNN) 사진 보도팀을 탑승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외 미국과 서구 군사잡지들은 민간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촬영한 중국의 해양팽창 사례들을 공개하면서 아세안(ASEAN)과 호주, 일본 그리고 인도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¹⁰ 2015년 5월 30일 개최된 상그릴라 회의에서의 미 국방장관 애쉬턴 카터 장관의 발언이 이전 척

⁷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군사적 대상이 아닌 비군사적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한 전쟁이었으며, 어느 양상으로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⁸ Department of Defense,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 Power: Forward, Engaged, Ready*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March 13, 2015); Abhijit Singh, ‘The new US maritime strategy – implications for maritime Asia,’ *PacNet*, No. 24, April 14, 2015 참조.

⁹ http://www.jcs.mil/Portal/36/Documents/Publications?National_Military_Strategy_2015pdf (accessed July 13, 2015).

¹⁰ 예를 들면 Airbus Defence and Space 와 Google Earth 등이며, 이들 영상정보들이 *IHS Jane’s Defence Weekly*, *IHS Jane’s Navy International*, *Defense News* 등에 2013년 말부터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헤이글 국방장관의 대(對)중국 비난 수위보다는 다소 낮았으나, 남중국해 현장에 대한 미국의 조치들은 다소 직접적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이 역내 국가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¹¹ 그 동안 미국은 동북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싱가포르와 오세아니아 호주 등과 긴밀한 군사안보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해양에 대한 우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동남아시아 국가에게 확대시키고 있다.¹²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중시전략 시발은 2012년 이라크에서 철수된 미 해병대 병력의 호주 다윈 기지에 순환 전개 선언이었다. 아울러 미국은 그 동안 비교적 관심을 덜 두었던 중국의 지리적 주변지역인 동남아시아 지역 아세안에 대한 함정 지원 및 방산협력 체결 등의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비교적 ‘중립적 성향(ASEAN Identify 또는 ASEAN Way)’을 보이던 아세안(ASEAN)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어느 수준과 차원에서 이들 국가들의 해양관할권 보호 능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 시각과 의문이 존재하나, 유럽에서의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과 아프간 철수를 재검토해야 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점차 salami slicing 전술에 의거 제1도련 범위에서의 해양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중국과의 힘겨운 경쟁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이 미국과 제한적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베트남은 미국과 방산협력을 체결하였으며, 미국은 베트남에 대해 해상초계기 판매를 허용하였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미국 등 서구와 일본으로부터 연안경비함정을 기부 받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다소 부정적이던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방산과학기술 협정과 무기판매 협정을 체결하여 자국의 해양관할권 보호 능력을 확충시키고 있다.¹³

2. 중국의 해양강국 선언과 일대일로 구상

다음으로 대륙국가 중국이 해양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양강국 지향은 중국의 해양의존성 증가와 그 증가 속도가 가속된 것에 따른 경제정책이며 중국 부상에 따른 지정학적 승부수(breakthrough)이자 그 동안 지리·역사적 경험의 분출된 표상이다. 우선 이는 중국이 중국 주변국의 잠재성장¹⁴을 고려하여 중국과 주변국 간 해양 연계성(maritime connectivity)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는 과거 서구 열강들이 해양으로부터 중국이 침략당하였던 열등한 역사인식을 벗어나, 과거 중국의 우월감을 부활시키려는 의도이다. 즉 이제 중국도 과거 서구 열강과 같은 ‘능력(capability)’을 구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중국을 견제하여 실시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전략 또는 군사력 재균형 전략에 대응하는 군사적 능력(military capability) 시험으로도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해양강국 개념을 그 동안 축적된 경제적 발전과 중국 부상에 따른 위상을 ‘해양’에서 시험하는 ‘상쇄적 국가대전략(offset national grand strategy)’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¹¹ Kelvin Wong, ‘US 7th Fleet set to expand multilateral exercises between Southeast Asian navies,’ *IHS Jane’s Navy International*, June 2015, p. 8.

¹² Ridzwan Rahmat, ‘Singapore, Malaysia, Indonesia consider co-ordinated patrols in the South China Sea,’ *IHS Jane’s Navy International*, April 2015, p. 9.

¹³ Jon Grevatt, ‘US, Indonesia commit to share intelligence,’ *IHS Jane’s Defence Weekly*, 27 May 2015, p. 15.

¹⁴ 2013년 10월에 선언된 ‘21세기 해양실크로드’를 경유하는 국가규모는 세계 인구 36%인 26억 명, 세계 GDP의 10%인 미화 7.4조 달러, 이들과 중국 간 무역규모는 중국 전체 무역액의 19%인 미화 7,838억 달러로 알려져 있다.

있다.¹⁵

이에 대해 긍·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우선 경제적 의도로 보는 시각이다. 중국의 해양강국 지향이 영국 등 유럽 열강과 같은 문명적으로 열세한 야만인(barbarian)들이 아시아를 강제로 점령하고 수탈하는 것이 아닌, 해양실크로드에 의한 지리적 연계성 모색 및 해양경제 협력으로 동아시아 안정과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순수적 의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제1차 중국-아세안 해양협력 기금¹⁶ 구축에 이어 제2 중국-아세안 해양협력 기금¹⁷ 과 해양실크로드 기금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일부는 이를 과거 서구 열강과 같이 힘과 압박으로 밀어 붙이는 강대국 국가전략이 아닌, 중국이 주변국과 상호 공존할 수 있다는 대(對)주변국 전략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과거 당(唐)과 한(漢)나라 시기의 실크로드 관련 역사적 해양문화 및 시설을 유엔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이변이 없는 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양강국은 당분간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정책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이 해양강국 개념을 해군력 증강을 통해 과거의 역사적 기득권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부정적 평가이다.¹⁸ 그 동안 중국 주변국과 미국 및 일본은 중국의 해양강국 지향이 해군력 증강으로 귀결되는 현상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나타냈다. 예를 들면 2012년 9월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랴오닝(Liaoning) 운용, 2013년 11월 동중국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선포 그리고 최근 2013년 9월 이래 지속적인 남중국해 남사군도 도서에 대한 준설작업, 인공섬 및 군사화 추진 그리고 동중국해 가스전 구역에 일방적 해상시설물 설치 등이다.¹⁹ 현재 중국의 국방비 규모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 전체 국방비 총액의 약 30% 이상으로 매년 2자리 숫자 증가율로 증액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중국 해군력은 이미 주변국 해군력 규모를 뛰어 넘는 우세한 수준이며 2049년에 이르러 세계 규모의 해군력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 5월에 발표된 중국 ‘국방백서’에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중국 부상 이후 중국과 주변국 간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가 대륙이 아닌 중국 패망의 근원이었던 ‘해양’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 모순이자,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중국 해양강국 지향이 과거 서구 열강의 사례에서 얻은 먼로주의(Monroe Doctrine) 선언과 같은 교훈을 주변국에 적용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일리가 있다.²⁰

그러나 최근 중국의 해양강국 추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일대일로 구상에 의거 다소 희석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 구상은 2015년 3월 28일 양회(兩會)를 통해 정식

¹⁵ Zhang Hongzhou and Arthur Guschin, ‘China’s Silk Road Economic Belt: Geopolitical Challenges in Central Asia,’ *RSIS Commentary*, No. 099, 24 April 2015.

¹⁶ 2011년에 개최된 제 14차 아세안-중국 정상회담에서 약 30억위안(RBM)(미화 4천7백만달러)를 중국-아세안 해양협력 기금으로 제시하였으며, 2012년 10월 4일에서 5일에 개최된 제 3차 아세안 해양포럼에서 확인되었다.

¹⁷ 이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25일 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에서의 해양위기관리와 해양협력 세미나에서 중국 사회자로부터 언급된 내용으로서 이후 일대일로 추진으로 인해 해양실크로드 기금으로 변경되었다.

¹⁸ 대표적으로 Robert D. Kaplan, *Monsoon: The Indian Ocean and the Fu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Random House Trade Paperbacks, 2011), chapter fifteen 참조.

¹⁹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Chen Mengwei, ‘G7 accused of ignoring the facts over stance on South China Sea,’ *China Daily*, June 10, 2015, p. 3; 서방의 입장은 Chun Han Wong, ‘China Builds Military Facilities on Islets,’ *The Wall Street Journal*, June 17, 2015, p. 3; 비교적 중립적 입장은 Ian Bremmer, ‘China’s Sea Change,’ *Times*, June 8, 2015, p. 8 참조.

²⁰ 예를 들면 Sukjoon Yoon, ‘Xi Jinping’s Monroe Doctrine: Rebuilding the Middle Kingdom Order?’ *RSIS Commentaries*, No. 102, 29 May 2014; Kai He and Huiyun Feng, ‘Rethinking China’s Monroe Doctrine,’ *RSIS Commentaries*, No. 128, 4 July 2014; Sukjoon Yoon, ‘Xi Jinping’s True Maritime Power,’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8, No. 3, Summer 2015, pp. 40-63 참조.

국가정책으로 문서화되었다.²¹ 현재 중국은 이를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전략 취약 지점인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서남아시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으며, 이를 중국의 대(對)주변국 외교정책과 연계시키고 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중심의 대륙실크로드 경제권과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연안국 중심의 해양실크로드 경제권을 일체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 이는 이미 중국이 추진하고 있었던 일부 계획과 성과들을 융합시킨 종합체로 보여진다. 예를 들면 2006년 6월 원자바오 총리가 미얀마를 방문하여 미얀마 시위트(Si Witt) 항구로부터 콘밍까지 800-900 km의 석유 및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에 합의한 것을 시발로 2012년 제시된 『중국-아세안 해양협력 기금 (ASEAN-China Maritime Cooperation Fund)』 그리고 2013년 9월 선언된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10월에 선포된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구상 그리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 등이다.²²

구체적으로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구현을 위해 주로 양자간 전략적 신뢰구축과 상호경제 발전 촉진을 목표(end)를 위해 무역 증진, 해양협력, 기반시설 투자, 재정(금융), 안보, 환경보호, 인적 교류 및 협력을 주요 방법(way)으로 삼아 철도, 도로, 공항, 항구, 통신, 에너지 파이프라인 및 물류허브 건설, 해외 산업공단(overseas industrial parks) 투자,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s) 형성, 재정협력 및 관광, 인적 교류/협력 등을 수단(mean)을 구사하는 등 주로 물류와 금융 “연계성(connectivity)”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원대한 국가전략에 표면적인 경제적 목적 이외 정치·외교적 목표가 내재될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²³ 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낸 이선진 대사는 중국 일대일로 구상을 중국 이외 역내 어느 국가도 제시할 수 없는 ‘수준’과 ‘범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으나, 일대일로 구상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자금 규모와 범위가 미국 주도의 금융질서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더욱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간 무역촉진권한(TPA) 법안을 합의에 이르면서 향후 미·중 간에 더욱 경쟁구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Ⅲ. 해양 아시아 추세와 과제

이러한 미국과 중국 간 해양경쟁은 결국 동아시아 역내의 다양한 해양갈등과 분쟁에 대한 적절한대응이 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무리한’ 해양지향적 국가정책과 군사전략을 채택하도록 하는 해양 아시아 현상을 만들었다. 특히 해양영유권 갈등, 해적 위협 그리고 환경 훼손 등의 초국가적 해양위협에 대한 우려는 해양 아시아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켰으며, 이는 동아시아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갈등과 대결로 확산되고 있다. 즉 안보는

²¹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약 12 개의 정부에 지시하여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 기관 이외 다양한 국영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rene Chan, “China’s Maritime Silk Road: The Politics of Routes,” *RSIS Commentary*, No. 051, 12 March 2015.

²² 특히 AIIB 창립회원국은 아시아 34 개국, 유럽 20 개국 그리고 미주와 아프리카 3 개국이다.

²³ Li Mingjiang,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New Round of Opening Up?” *RSIS Commentary*, No. 050, 11 March 2015.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하는 동아시아 특유의 이원적 구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넘어야 할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인식된다.

1. 아세안의 위기의식과 대응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아세안의 해양지향적 국가전략과 군사전략 채택이다. 우선 대표적 사례가 인도네시아이다. 그 동안 거대한 인도네시아 도서 이내 범위 집중하던 과거 정권과 달리 2014년 10월 20일에 취임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해양지향적 국가전략과 대외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조기에 “인도네시아 해양의 축(Indonesia Maritime Axis)” 개념을 제시되었으며, 이후 인도네시아 해양국가 위상을 인도양과 태평양 간을 연결시키는 ‘인도네시아의 해양 기둥(Indonesia Maritime Fulcrum)’ 개념을 확대되었다.²⁴ 이는 첫째, 국가해양안보 강화, 둘째, 인도네시아 외교정책을 인도양까지 확대, 셋째, 인도네시아 해군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도네시아의 전 지구적 역할을 강조한 ‘글로벌 해양의 축(Global Maritime Axis)’ 역할을 선언한 것이었으며, 역내에 유행하고 있는 해양 아시아 추세에 부응하면서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인도네시아 위상 구축을 선언한 것이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남사군도는 물론 나투나 군도에 대한 영유권 갈등을 중국과 갖고 있으며, 인도와는 인도양을 접하고 있어 전면으로부터의 해양위협에 직면해 있다. 특히 남중국해 남사군도(Spratlys)에서 중국과 해양영유권 분쟁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위상을 해양국가로 재정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해군력 증강으로 통해 국가 해양이익과 관할권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이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도서들을 북부, 중부 그리고 남부 도서벨트로 상호 연계시키며, 이를 위해 ‘최소하며 기본적 해군력(Minimum Essential Force: MEF)’을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건설하는 계획들이 발표되어 추진되었었다.²⁵

현재 인도네시아 해군은 자국 방산능력 향상 그리고 이를 통한 신형 함정 및 잠수함 확보를 주요 현안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재정 여건이다.²⁶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코 위도도 행정부는 국방비 증액 및 해외 투자를 유도하는 2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 등이 주요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영국 제인군사연구소 발행 『제인주간지(IHS Jane's Defence Weekly)』에 의하면, 현재 인도네시아 해군은 KCR-60M 미사일 탑재 연안경비정과 트리마란 선형의 크레왕(Klewang)급 연안경비정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이하게 KCR-60M 미사일 탑재 연안경비정 탑재 미사일로 중국 산(産)C-705 함대함 미사일로 최근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⁷

인도네시아 이외 중국과 남중국해 남사군도에서 해양 영유권 갈등을 갖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의 아세안 회원국들이 중국의 일방적 기정 사실화 전략(fait

²⁴ 조코 위도도의 인도네시아 해양 기둥 선언이 그 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던 개념과 전략을 재현시켰다는 비난이 있더라도 전혀 새로운 구상은 아니더라도 이는 거대한 도서국가 인도네시아의 역내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인도네시아의 해양이익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국가전략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²⁵ Ristian Atriandi Supriyanto, 'Indonesia's Natuna Islands: Next Flashpoint in the South China Sea?' *RSIS Commentary*, No. 033, 16 February 2015.

²⁶ 현재 조코 위도도 정부는 비교적 높은 비율의 국방비를 배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지 확장 및 함정 건조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 역내 국가들의 국방비 수준은 대부분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경제규모를 고려시 인도네시아 미화 83억 7천만 달러로 이는 호주의 260억 달러, 중국의 1120억 달러, 인도 360억 달러, 일본 510억 달러 그리고 한국 31억 원 8천만 달러와 비교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²⁷ 'In brief, *IHS Jane's Defence Weekly*, 27 May 2015, p. 16; Ridzwan Rahwat, 'Indonesia confirms deployment of C-705 missiles on KCP-60M class,' *IHS Jane's Navy International*, June 2015, p. 4.

accompli)과 살라미 슬라이스 전술(salami slicing)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해양지향적 군사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그 동안 1974년과 1988년 2차의 무력충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공산당의 친(親)중국적 성향에 의거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2010년 동중국해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서의 중국과 일본 간 분쟁과 2013년 11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을 본 베트남은 과거 적아(敵我)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안보 및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0월 12일에 베트남 해경(Vietnamese Coast Guard)을 창설하여 네덜란드와 기술협력 하에 2,400톤 규모의 다멘(Damen) 9014급 해경함정 4척을 자체 건조하여 점차 증대되는 중국의 일방적 법집행 조치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러시아와 6척의 Project 636 킬로급 잠수함 도입을 협의하여 2014년부터 매년 1척씩 도입하고 있으며, 러시아 Project 11671E 제파트급 피리킷함을 4척 도입하고 있고, 최근엔 네덜란드 시그마 9814급 연안호위함 2척 자체 건조에 합의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13년 미국으로부터 P-3C 오라이온 3대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하였다.²⁸

그 외 중국에 비교적 호의적이던 말레이시아가 2013년 1월 1일 말레이시아 인접 제임스 쇼올(James Shoal)에서 중국 해군 함정 갑판에서의 ‘역사적 임무’ 수행 선언 등에 충격을 받아 해군기지 확충과 대대적 함정 건조 계획 추진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 5년 동안 군사력 건설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계획서를 발표하는 등의 적극적 군사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해군의 경우 2009년에 프랑스로부터 2척의 스킨급 잠수함을 도입한 이래 3,000톤 규모의 ‘제2세대 경비함정-연안전투함(Second Generation Patrol Vessel-Littoral Combat Ship: SGPV-LCS)’ 2척을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등의 해양국가 위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필리핀은 2011년과 2012년에 미국 해안경비대로부터 헤밀톤급 피리킷함 2척을 인도받았으며, 현재 2척의 신형 프리킷함 건조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 필리핀은 중국의 남중국해 남사군도 영유권 주장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UN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재소하여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소명자료 제출과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나, 중국의 거부²⁹로 난항에 이르고 있다.³⁰ 아울러 필리핀은 미국과의 기지사용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해군과의 남중국해 공동경비작전 추진 등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과도 공적개발지원(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원 형식으로 다목적 기동선박 10척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³¹

2. 『호주-인도-일본』 간 해양연맹

중국의 해양강국 지향과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는 미국의 해양전략에 인도, 호주 그리고 일본이 ‘해양연맹(Maritime Entente)’이 동조하여 공동으로 중국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²⁸ Commodore Stephen Saunders, RN, *IHS Jane's Fighting Ships 2014-2015* (Surrey, UK: Jane's Information Group, 2015), pp. 1008-1016.

²⁹ 이에 대한 논란은 남중국해 남사군도에서의 당사국 간의 주권(sovereignty)과 해양경계(maritime delimitation) 문제를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권위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어느 한 당사국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어떠한 효력을 나타내는가이다. 중국은 ‘아니다’이며, 필리핀은 ‘할 수 있다’라는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

³⁰ 당시 필리핀은 첫째,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둘째, 중국의 9단선은 효력이 없다. 셋째, 중국이 주장하거나 점유한 남중국해 도서는 해양영토가 아니다. 넷째,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필리핀의 정당한 해양관할권 주장에 개입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은 남중국해 환경을 복원시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켰다는 5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³¹ Jon Grevatt, ‘Philippine Coast Guard signs for Japanese MRRVs,’ *IHS Jane's Defence Weekly*, 29 April 2015, p. 16.

국가는 주로 해군원정작전(naval expeditionary operation)을 위한 해군력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2014년 10월 취임한 인도 모디 수상은 ‘주변국 외교정책(Neighbors-First foreign policy)’과 ‘인도 자주방위 위주 군사전략(Made-in-India Defence Policy)’을 지향하며 인도양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해양으로 진출하는 ‘아시아-태평양 시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³² 이는 2003년 이후 증대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2014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인도 방문과 2015년 5월 모디 수상의 중국 방문으로 브릭스 개발은행(BRICs Development Bank 또는 New Development Bank: NDB) 설립과 방글라데쉬-중국-인도-미얀마(Bangladesh-China-India-Myanmar: BICM) 경제회랑 (Economic Corridor) 형성 선언 등에서 증명되고 있다. 아울러 스리랑카 역시 인도와 중국 간 국가이익을 추구하면서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³³

특히 중국이 점차 인도양 진출을 기정 사실화하고 해군작전 범위를 스리랑카, 몰디브, 세이셸 및 지브디로 확장하자, 인도는 2015년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인도 국경일 국빈 방문 초청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방산 및 안보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중국과 해양 영유권 분쟁이 있는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을 증대시키면서 태평양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 해군의 미국 해군 첨단 해상초계기 P-8A 도입과 2014년 10월 중국의 일방주의적 해양 영유권 주장에 직면해 있는 베트남과의 약 미화 1억 달러 규모의 연안경비정 구매 및 방산협력을 체결하고, 인도 석유가스공사(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 ONGC Videsh)와 베트남 석유공사(Petro Vietnam) 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례이었다. 최근엔 양자간 해군훈련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인도는 2014년 9월 모디 수상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기존의 인도-미국 해군 간의 ‘마라바르(Malabar)’해군훈련을 일본으로 확대시켜 실시하고 있는 등 소위 ‘동방에서의 행동 정책(Act East Policy)’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인도 자국 생산 항공모함 건조를 비록 비용 증대 및 건조시기 연기 등의 지연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으나, 자국산 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이은 항공모함 건조에 주력하여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고 있다.³⁴

일본 보수 성향의 신조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 재해석에 따른 ‘집단지위권(collect defense posture)’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2014년 12월 19일 발표된 외교-국방장관 회담(일명: 일본-미국 안보협의 위원회: Japan-US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2+2)에서의 합의를 근거로 2015년 전반기에 ‘미일 방위지침(Guideline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개정을 추진하여 2015년 4월 아베 수상의 미국 방문 시에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근간으로 작전활동 범위를 점차적으로 동남아시아 및 인도양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2015년 방위백서 및 국방비 배정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MV-22 틸티드 항공기 및 상륙장갑차 도입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계획 중이며, MV-22의 경우 미국 정부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특히 일본은 인도와의 관계를 ‘특별한 전략적 전 지구적 파트너십(A Special Strategic and Global Partnership)’ 관계로 격상시키면서 일본 신마이와(ShinMaywa) 방산업체 생산의 해상자위대 US-2

³² 이는 1991년 구소련의 아프간 침입, 1995년 아세안(ASEAN)을 대화파트너로 지정, 1996년 아세안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참가, 2002년 인도-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2010년 아세안과의 지리적 연계성 10년 계획 수립 등에 이은 전임 정부의 ‘동방정책(The Look East Policy)’의 계승이었다.

³³ Andrew Tate, “Chinese submarine docks in Sri Lanka for first time,” *IHS Jane’s Defence Weekly*, 8 October 2014, p. 14; Ian Bremmer, “Sea of Troubles,” *Times*, January 19, 2015, p. 8; Nikhil Kumar, “Little Big Island,” *Times*, April 20, 2015, pp. 24-27. 최근 라자팍사스 시리세나(Rajapaksa Sirisena) 수상이 집권한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통신건설공사와 발주한 15억불 콜롬보 항구 투자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³⁴ Andrew Clevenger, ‘In Global Exports, Smaller Nations Seek Edge,’ *Defense News*, March 23, 2015, p. 18.

해상초계기 인도 판매를 추진 중에 있다.³⁵

호주의 경우 기존의 중국 부상에 대한 소극적 입장에서 지난 5월 30일 상그릴라 회의 시 호주 발표 내용에서 식별할 수 있듯이 중국의 동남아시아 해양팽창에 대한 미국 우려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며, 해외 원정작전이 가능한 해군력 건설에 적극적이다. 현재 대형 상륙함(LHD) 2척을 동시적으로 건조하고 있으며, 1번함 캔버라 대형상륙함이 2016년 취역을 앞두고 있으며, 2번함 아틀레이 대형 상륙함이 건조 중에 있다. 이들 함정에는 미국 차세대 함재기 F-35가 탑재될 예정이다.

이에 전반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호주를 연계시키는 해양협력이 중국의 해양팽창 전략에 대응하는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강한 인도를 선언한 인도 모디 정부가 이에 참가하여 미국-호주-일본-인도 간 해양연맹을 구축하는 형세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보협력만이 아닌 방산협력으로까지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가 미국 및 일본 해상초계기 도입에 이어 일본으로부터의 잠수함 건조를 위한 방산협력과 호주가 일본 잠수함 도입을 고려하는 등의 추세이다.

3. 북한 해양위협 증대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러한 해양 아시아 추세가 북한에게는 극히 비정상적으로 적용되었다.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한반도 분단은 북한과 한국 간 극한 국력 격차가 나타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 북한이 더욱 역내 안보구도에 있어 고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상도발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6.25 전쟁 후유증인 비무장지대 측면인 한반도 서해와 동해에서의 다양한 재래식 위협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자행함으로써 일종의 ‘벼랑끝 전략(Brinkmanship strategy)’을 지속적으로 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8년 제1 연평해전, 2002년 제2 연평해전 그리고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이어 1996년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시작으로 2014년 북한 헌법에 핵무기 보유 국가 명시, 2010년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올해 5월에 공개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수상 이격(ejection) 시험 등 이었다.³⁶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 서해와 동해는 재래식 안보위협이 집약된 긴장의 해양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동북아 해양은 중국 에너지 확보 다변화 전략, 러시아의 시베리아 에너지 개발과 중국의 동북 3 성 경제개척과 관련된 주요 물류 매개체로 간주되고 있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경유하여 에너지 수출 및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나진항구 부두 사용권 획득과 러시아의 운성-나진 간 철도공사 발주 등이다. 아울러 한국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0월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를 발표하여 국제사회에 고립된 북한을 설득하여 협력하는 방안과 북한이 부정적일 경우 북한을 우회하여 해양을 경유하여 대륙으로 진출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다.³⁷ 특히 한반도 주변 해양을 낀 국가 기관, 운송 및 물류업체 그리고 지방자치 기관 간 활발한 교류 및 협력이 추진 중에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하여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과 중국-미얀마 간

³⁵ Kyle Mizokami, ‘Japan’s Emerging Defense Export Industry,’ *USNI*, February 23, 2015 http://news.usni.org/2015/02/23/japans-emerging-defense-export-industry?utm_source=... (accessed February 25, 2015).

³⁶ Sukjoon Yoon, ‘Expanding the ROKN’s ASW capabilities to deal with North Korean SLBMs,’ *PacNet*, No. 31, May 28, 2015.

³⁷ 외교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2015』 참조.

국제경제회랑과 같이 중국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 간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서해와 동해를 중심으로 『한국-중국 간 경제회랑(The China-South Korea Economic Corridor)』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는 그 동안 우리 외교부가 발간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아시아 패러독스를 넘어 평화협력의 동북아로』 및 2015년에 개정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2015』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에서 식별되고 있다.³⁸

IV. 해양 아시아 추세 평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와 동평구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해양 아시아는 동아시아의 지리적 공간에 억매인 해양을 중심으로 대립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주된 원인이자, 동아시아 지역안보의 문제이다.³⁹ 이에 따라 역내 국가들의 국가정책 및 군사전략을 구현하는 전략적 사고가 다분히 충돌적이다. 동북아 해양은 이미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극복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 동북아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한국의 전략적 구상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 간 역할 및 관계 정립에 있어 역내 다른 국가와 다른 특성과 양상을 보이고 있다.

1. 해양 아시아 추세 평가

현재 동아시아는 전례에 없는 해양지향적 국가정책 또는 군사전략을 각자 지향하는 해양 아시아 추세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국의 해양팽창에 대응하는 미국의 해양협력 구도에 호주, 인도, 일본 그리고 아세안 국가 등 역내 국가들이 동시적으로 포함(inclusiveness)되면서 경쟁 양상이 더욱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상그릴라 회의에서 영국 제프리 킬(Geoffrey Till) 박사가 발표 논문을 통해 해양 아시아 현상과 최근의 해양 갈등 간의 확산 추세를 ‘수평적으로 악화(horizontal Escalation)’로 정의한 사례이다.⁴⁰

해양 아시아 추세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가 있다. 첫째, 미래지향적 동아시아 해양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양국 간에 여전히 불확실하며 상호 협력 구도이기 보다 일종의 ‘제로섬 게임’을 위한 해양정책과 전략을 지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전략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해양 강대국 미국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고 신흥 해양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나 임의적 해석에 따른 일방적 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간에 협력 구도 보다는 갈등 국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이들 간의 갈등이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룬 주요 매개체인 역내 해상교통로가 경유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³⁸ 외교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아시아 패러독스를 넘어 평화협력의 동북아로』; 외교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2015』;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서울: 청와대 국가안보실, 2014년 7월); Office of National Security, The Republic of Korea, *A New Era of Hope: National Security Strategy* (Seoul: Officer of National Security, Blue House, October 2014) 참조.

³⁹ Thomas G. Mahnken and Dan Blumenthal, ed., al., *Strategy in Asia: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Regional Security* (Sanford, CAL: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4) 참조.

⁴⁰ Geoffrey Till, ‘New US Maritime Strategy: Why It Matters,’ *RSIS Commentary*, No. 095, 21 April 2015; Ridzwan Rahmat, ‘Asia facing horizontal escalation of disputes,’ *IHS Jane’s Defence Weekly*, 27 May 2015, p. 16.

발생되고 있어 더욱 역내 국가들의 우려와 관심을 받고 있다. 반면 실제 공해상 자유로운 항해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은 부재한 상황이다. 미국이 원칙적 권리 보장을 주장한 반면, 중국은 한번도 저해한 사례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학자와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기득권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전략적 대화(strategic communication)’ 또는 ‘제도적 대화(legal communication)’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⁴¹

둘째, 역내 국가들의 해양지향적 국가정책 및 군사전략이 수준 미달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2015년 해양전략은 역내 동맹국, 파트너십 국가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해양협력을 강조하며, 이들 국가에게 일정 수준의 자국 국가해양관할권 보호 능력을 갖출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역내 국가 중에 일본, 한국, 호주 및 인도를 제외한 국가 모두가 수준 미달이다. 반면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주권적 문제로 간주하여 협상 자체를 거부하며, 오히려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연계시킨 일대일로 구상을 제시하면서 상호 공생하고 윈-윈 하는 경제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즉 딜레마에 직면해 있으며, 상호불신(trust deficit)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후유증이 모두 역내 국가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과 중국 간 협력 보다 갈등 국면이 많은 영향이 역내 국가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이들 국가로 하여금 힘겨운 해군력 현대화 군사전략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구조와 산업기반이 취약한 아세안 회원국들이 사회기반시설 투자 보다, 항공모함, 잠수함, 첨단 함정 그리고 항공기 등의 비교적 대규모 국방비를 요구하는 경성안보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는 현상이다. 대표적으로 동중국해, 남중국해 남사군도에서 중국과 해양영유권 갈등을 갖고 있는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의 해군력 강화 및 해양경찰 창설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이며, 군사전문가들은 이를 해군력 군비경쟁으로 정의하고 있다.⁴²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이 있다. 우선 그 동안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던 미국이 보다 적극적 입장을 나타내야 한다는 주장이다.⁴³ 특히 미국이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되어 국제법과 제도적 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자제와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과의 군사안보 협정 및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일본, 호주, 인도, 싱가포르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는 당사국이 아닌 미국의 필요 이상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역내 해양이슈를 군사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제기한다.⁴⁴ 이들은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매립작업이 중국만이 일방적으로 취한 행위가 아니며, 단지 매립작업 규모와 정도에 있어 범위와 수준 차이가 있다면서 무리하게 역내·외 이해상관자(stakeholder)를 개입시키기 보다 남중국해의 경우 2002년 행동지침 선언(DOC: Declaration of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에 이은 다소 구속력을 갖는 행동지침(COC: Code of Conduct) 합의를 통해 당사자 간 국제법과 제도권 범위 내에서 평화적 해결방안을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한다. 실제 이러한 이견을 나타낸

⁴¹ 대표적으로 호주의 Hugo White 박사의 미국과 중국 간 역할 분담론 주장이다. Hugh White, *The China Choice: Why America Should Share Power* (Sydney, Australia: Black Inc, 2012) 참조 및 이에 대한 국내 소개는 휴 화이트, ‘미국은 중국과 권력을 공유해야,’ 『중앙일보』, 2014년 4월 1일, 29쪽.

⁴² Sukjoon Yoon, ‘Maval Modernisation in East Asia: four puzzles,’ in Geoffrey Till and Jane Chan, ed. al., *Naval Modernisation in South-East Asia: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 (London: Routledge, 2014), pp. 263-282; Rahul and Andrew Tate, ‘Carrier face-off: India and China build up their naval aviation,’ *Jane’s International Defence Review*, July 2015, pp. 42-49.

⁴³ Geoffrey Till, ‘New US Maritime Strategy: Why It Matters,’ *RSIS Commentary*, No. 095, 21 April 2015; Sukjoon Yoon, ‘Why is China Militarising the South China Sea?’ *RSIS Commentary*, No. 113, 11 May 2015.

⁴⁴ Sam Bateman, ‘Does the US know what it’s doing in the South China Sea?’ *The Strategist*, 19 May 2015.

사례가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상그릴라 회의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이견 대립이었으며, 이어 호주와 영국 그리고 상그릴라 회의 사회국이었던 스위스까지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으며, 영국의 경우 기존 '5개국 방위협정(Five Powers Defence Arrangement)'⁴⁵을 근거로 향후 남사군도 문제에 있어 외교적 및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였다.⁴⁶ 최근 미국 국방성은 동남아시아 해양안보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의회로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약 4억 2500만불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대륙중국이 “해양”을 끌어 들인 것은 매우 위협하다는 주장이다.⁴⁷ 특히 중국 국가재원의 제한성을 고려할 시 중국의 해양강국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⁴⁸ 실제 중국 해양강국과 일대일로 구상이 중국 위협론으로 귀결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주변국에 대해 경제적 지원으로 대(對)중국 경제적 의존성을 높이면서 해양영유권 갈등에 있어 제도적 기존과 국제법적 원칙 보다, 오히려 일방적 조치로 기정사실화 전략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우려이다. 심지어 역내 국가들 간에 지정학적 함의에 방점을 둔 일대일 구상이 향후 중국의 과거 중화주의 또는 중국식 먼로주의 선언 등과 같은 지정학적 ‘함의’와 ‘영향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이러한 해양 아시아 추세를 보는 국내 시각은 다음과 같다.⁴⁹ 우선 그 동안 해양을 기반을 성장한 무역기업과 물류업체들은 대체로 긍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즉 해양갈등 및 대결 국면은 근대국가(nation-state) 과정을 거치지 못한 연유에서 비롯된 파생물로서 이미 탈근대기에 진입한 역내 경제구조와 해양질서를 고려할 시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해상 자유로운 항해 권리와는 별도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해양 아시아 특히 중국의 해양강국 지향을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안보 구도에 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보는 안보 중시자들은 해양 아시아를 미·중 간의 해양갈등 국면과 일치시키는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전략적이며 제도적 대화가 부재한 상황하에 역내 공해상 자유로운 항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각자의 자구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기득권 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해양연맹을 이루어 중국의 일방적 행위와 역사적 기득권 주장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⁵⁰ 아울러 해양 아시아 추세를 역내 새로운 레짐 형성을 위한 과도기적 과정으로 보는 균형적 시각도 일부 존재한다. 이들은 부정적 시각 보다 긍정적 시각에서 역내 중견국가(middle power) 간의 해양협력을 통해 미국과 중국 간의 해양갈등을 완화시켜 유엔해양법협약 등의 국제법에 의한 제도적 해결을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⁴⁵ 영국은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뉴질랜드와 5개국 방위협약에 의거 공동 안보를 지향하고 있다.

⁴⁶ Ridwan Rahmat, 'SCS dispute becomes test case for US-China ties,' *IHS Jane's Defence Weekly*, 17 June 2015, pp. 24-25.

⁴⁷ Li Mingjiang,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New Round of Opening Up?'

⁴⁸ 이는 2015년 6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 '일대일로와 아시아 공영(One Belt and One Road and a Win-Win Asia)' 포럼에서의 중국 그리고 중국 주변국 학자와 전문가로부터 제기된 현안이다. 이는 중국도 고민이 크게 있음을 의미한다.

⁴⁹ Sukjoon Yoon,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The South Korean Perspective,' a paper represented at *The 5th Asia Research Forum* entitled "One Belt and One Road and a Win-Win Asia" hosted by Asia Research Center of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on June 11, 2015 in Beijing, China.

⁵⁰ 이는 그 동안 미국 내 군사지휘관 및 의회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으며, 최근 발표된 2015 해양전략, 미일 방위협력 개정 및 각종 싱크탱크 연구소의 보고서 주된 논리이었다.

있다.⁵¹

이에 한국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즉 긍정적 차원에서 해양 실크로드 구상을 포함하는 일대일로 구상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와 연계시키며, 해양 아시아 추세에 따른 부정적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간 평화협력체를 구성하는 동평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전자가 중국의 해양강국 지향과 일대일로 구상 추진 등에 따라 중국과의 갈등 국면 보다 상호 윈-윈 하는 협력을 유도하려는 양자간 접근이라면, 후자는 내륙으로 고착된 북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북방정책(Look North Policy)’을 지향하며 동북아 다자간 협력을 주도하려는 접근이다.

우선 그 동안 북한의 대규모 군사위협에 대응하여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한국이 해양을 경유한 무역중대, 산업분업화와 상호의존성에 의거 중국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을 지원하는 해양세력인 미국과 이를 지원하는 일본과의 군사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향후 한국이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따라 한국의 국가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 양국은 냉전적 산물인 부정적 요인들을 뒤로 하고, 미래지향적 발전과제들을 양국 간 경제적 교류 및 외교적 협력에 접목시킴으로써 성공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및 성숙화를 이루고 있으며, 2015년을 기점으로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특히 2015년은 양국 정상의 집권 3년차 해(年)로서 그 동안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의미하던 각종 “선언” 및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행시켜야 하는 원년으로 간주되고 있다.⁵²

이에 2015년부터 양국 정부는 그 동안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의 국민, 특히 젊은이들 간에, 경기활성화, 향유하는 생활수준 향상 그리고 전통적 협력공간 증대를 피부로 접목시키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으며, 현재 한중 양국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 및 학자 간 한중 해양실크로드 전문가 국제학술대회가 이미 개최되고 있다.⁵³ 이 와중에 양국간 주로 서해와 동해를 통해 이루어 지는 해양교류 및 협력은 과거 내륙에서의 변경무역이 아닌, 서해를 통한 양국 국민과 기업 그리고 기관 간 인적 교류, 비즈니스 왕래 및 물류교환은 물론 전통(tradition, 傳統), 역사(history: 歷史) 그리고 상호보완적 거버넌스 또는 국제법 레짐이 복합된 형태(modality)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 간 교류 및 협력은 중국의 주변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고유 모델이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국의 특수한 역할에 기인한다. 첫째, 성공적 정·경 분리에 의해 민감한 문제(북한)를 해결하는 국가, 둘째, 주변국 중 유일하게 중국에 교훈을 줄 수 있는 국가, 셋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 중 미국과 군사동맹을 갖고 있는 국가, 넷째, 가까운 역사적 경험과 과정을 갖고 있는 국가, 다섯째,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 여섯째, 중국과 미국 간 완충지대(buffer zone)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 마지막으로 대부분 중국 주변국들의 정부가 부패가 높은 편이나, 한국만은 비교적 투명하고 부패하지 않은 정부가 운용되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은 이러한 장점이자 특수성을 한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에 적용하고 있으며, 주된 지리적 매개체는 서해와 동해이다.

⁵¹ Sukjoon Yoon, “South Korea’s Debate on China’s North Korea Policy: Is President Park Listening?” PacNet, No. 55R, August 26, 2013; Sukjoon Yoon,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 draft paper presented at The 5th Asian Research Found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in June 11, 2015, in Beijing.

⁵² 윤석준, “2015년 한중 해양경제 획정 실무회의: 독인가 약인가?” 『China Watching』, 제 3호, 2015년 3월 30일.

⁵³ 『海事新聞』, 2014년 9월 22일, 8쪽.

아울러 중국 역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중국 제1도련 방어선의 시작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21세기 해양실크로드 연장선인 한반도 서해에서의 한중 간 해양협력을 통해 해양강국을 실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중국 동북 3성의 에너지를 중국 동부 연안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동해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이를 중국과 아세안 간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대표적 성공사례로 시현하고자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⁴

3.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동평구)

한국의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은 조치가 동평구이다. 우선 동평구는 공동 연성안보 이슈인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 사이버스페이스, 보건, 마약 및 재난관리를 추진과제로 제시하여 이를 근간으로 경성안보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참여 유도, 기존의 다양한 동북아 내의 협의체 및 다자간 협의체 과정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를 에너지, 철도 물류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대륙’, 기술과 문화를 융합시키는 창조역의 대륙 그리고 이를 동평구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평화의 대륙으로 만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제시하여 동평구의 최종 목표가 유라시아 진출과 통한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즉 경성안보가 주류를 이루는 동북아에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구성하기 위해 연성안보 현안부터 접근하여 현존하는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협력체를 중심으로 역사, 영토, 이념 대결 및 지리적 협소성을 극복하자는 구상이다.

또한 동북구는 친근(親), 정성(誠), 호혜(惠) 그리고 포용(包)을 제시한 중국의 주변국 외교 원칙과 내륙 실크로드 경제권과 해상 실크로드 개념을 융합한 일대일로 개념을 주로 무역 증진, 해양협력, 기반시설 투자, 재정(금융), 안보, 환경보호, 인적 교류 및 협력을 원칙으로 하는 일대일로와 기본 방향과 원칙에 있어 근접성을 보이고 있다. 실제 동평구 2015는 신뢰(Trust),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그리고 협력(cooperation)의 4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층적(multi-layered), 개방적(open), 참여적(co-ownership), 점진적(gradual), 보완적(complementary)의 5구성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간 협력만이 아닌 국제기구, 학계 그리고 민간 협력까지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평구가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13년 5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국민방문 시 미국 의회 합동연설에서 ‘미래 아시아 협력과 질서가 역내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안보협력은 유럽과 비교 시 미진한 현상을 ‘아시아 패러독스’로 언급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 동평구 추진을 선언한 사례였다.⁵⁵ 주요 대상은 중국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몽골, 북한, 러시아 그리고 기타 지역 국가들이다. 2014년 발간된 동평구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정치(일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Trustpolitik)의 3대 축으로 역할을 하며, 구체적 실천을 통해 점진적 신뢰를 쌓아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

⁵⁴ 윤석준, “2015년 한중 해양경계 획정 실무회의: 독인가 약인가?”

⁵⁵ 외교부, 『신뢰외교 2014 Trustpolitik 7-12월』 (서울: 외교부, 2014년 12월) 및 외교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아시아 패러독스를 넘어 평화협력의 동북아로』 참조.

V. 동북아 해양평화협력 구상 개념, 추진과제와 북한 문제 극복

한국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외교이슈의 집합체인 동평구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이 전향적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반드시 해양을 경유하거나 고려해야 하는 다자간 지역협력 구상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역내 해양협력을 견지하는 비전이 부재하여 역내 국가들이 부담을 모두 짊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담을 해양에 적용시켜 동해평구 개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발견되는 갈등과 대결국면이 동북아 해양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어업 문제 등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첫째, 공해상에서의 자유로운 항해 권리가 국제법에 의거 보장되고 있고, 둘째,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역내 해양무역이 저해를 받지 않으며, 셋째, 북한과 미국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국 모두가 유엔해양법협약 회원국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이 비교적 잘 적용되고 있는 해양이라는 것 그리고 넷째, 역내 새로운 해양 레짐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극이사회 업저버 국가로서 새로운 대체 항로 개설에 매우 적극적이다. 지난 7월 8일에 중국 코스코(COSCO) 해운공사가 2013년에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북극해 시험운항에 이어 중국 다롄항을 출항하여 8월 중순까지 스웨덴 바르그(Varberg) 항구까지 시험운항을 재시도하였다. 한마디로 동북아 국가들은 해양을 통해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 경제협력 구도를 형성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6월 29일자 『해사신문(海事新聞)』은 국내 CJ대한통운 자사 소유 선박이 7월 중에 중동에서 러시아 야말 반도까지 북극해 항로를 이용한 시설장비와 자재를 운송할 계획으로 보도하였다.

1. 동평구 제한점과 동해평구 개념

그 동안 동평구에 대한 주변국 또는 관련국의 반응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⁵⁶ 첫째, 이는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만을 근간으로 하며, 경성안보가 주류를 이루는 동북아에 연성안보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구성하자는 구상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 간의 동북아 경성안보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모두 실패하고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 문제 당사국인 한국이 연성안보 이슈를 먼저 해결한다고 하여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둘째, 현재 6자회담이 거의 사장(死藏)되어 있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역사 문제로 재개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전략에 편승한 일본이 더욱 경쟁국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경성안보를 제외한 가운데 주체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연성안보를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동평구 2015는 공동 연성안보 이슈로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 사이버스페이스, 보건, 마약 및 재난관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의 참여 유도, 기존의 다양한 동북아 내의 협의체 및 다자간 협의체 과정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를 위해 누가 무엇을 매개체로 하여 해결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⁵⁶ 2015년 4월 2일에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산호홀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간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동북아 해양평화협력구상 전문가 토론회』 발표논문 참조.

셋째, 동평구가 연성안보 이슈 해결을 제창하고 있으나, 연성안보 이슈가 오히려 핑계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어느 ‘장소(venue)’에서 누가 해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남사군도 인공섬 작업은 영유권 분쟁 해역에 매장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선제적 조치임을 고려 시 당사국 간 해양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거나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나, 제3자 개입으로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일부 재난지원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마저 해양 아시아를 지향하는 역내 국가들의 ‘해군력’ 건설의 주된 핑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해상에서의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재난 수색 및 구조(SAR) 작전이다. 실제 호주 대형 상륙함, 중국 항공모함 건조 및 일본의 대형 구축함 건조의 또 다른 임무가 역내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HA) 및 재해재난지원(DR) 작전이다. 단지 기존 아태지역 경제안보 협력체를 통해 보완시킨다는 원칙만 존재할 뿐이다.⁵⁷ 그 동안 2013년 11월 14일에 개최된 국립외교원 설립 50주년 기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신뢰외교’ 세미나와 2014년 10월 28일에 동평구 협력회의(명칭: 제1차 동북아 평화협력 회의: High-level Meeting on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등이 개최되었으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이슈 개발과 상설회의체 운영이 없는 실정이다.⁵⁸ 아울러 연성안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매개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시가 없다.

이에 경성안보와 연성안보가 공동으로 적용되고 매개체가 되고 있는 해양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동평구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동해평구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 각국과 미국이 해양 아시아를 지향하고 있는 바, 이들 해양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은 우선순위 이슈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연성안보와 경성안보의 구별 보다 역내 협력을 위해 해양 아시아의 동인인 해양문제를 문제 해결하여 역내 안보협력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일부는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문제는 연성안보 이슈이나 경성안보 이슈 이상의 민감성과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 역내 대결국면 역시 대부분 해양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갈등 또는 협력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심지어 에너지 확보를 위한 지정학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⁵⁹

또한 연성안보 이슈가 동아시아 경제성장과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해상물류와 무역교류 및 협력과는 그리 큰 위협이 되지 않다. 오히려 관련국가가 연성안보 이슈를 역이용하여 자국의 ‘해양 아시아’를 합리화시키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연성이슈를 발생시킨 주체가 나서는 것이 아닌, 피해를 받는 대상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일부 국가의 거부감이다. 예를 들면 환경은 중국으로부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의 경우 미국이 대체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기 보다 보다 저렴한 에너지를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맞추기 위한 노력만이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이며, 초국가적 범죄행위 역시 원인을 공급하는 국가가 나서기 보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있는 증상이다. 궁극적으로 동평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양문제를 해결하는 동해평구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동시에 복잡하게 지리적으로 연계(interconnection)된 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증진을 해양을 통해 구축할 수 있다.

⁵⁷ 예를 들면 아세안 지역포럼(ARF), 한중일 3국협력,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이다.

⁵⁸ 외교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2015』 21 쪽.

⁵⁹ 서정경, ‘일대일로의 지정학: 유라시아를 둘러싼 미중 경쟁,’ 『차이나 브리프(Sungkyun China Brief)』, 제 3 권제 3 호(통권 36 호) 2015 년 7 월 1 일, 48-54 쪽.

2. 동해평구 추진과제와 문제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동해평구 추진과제가 식별된다. 우선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의 경제협력으로 정치·군사적 긴장을 해소시켜야 한다. 첫째, 서해(黃海)에서의 한국-중국 간 경제회랑 형성이다. 한국은 서해를 군사·정치적 매개체에서 경제적 매개체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적 민감성을 극복해야 한다. 서해는 1894년 중국 지도부가 최초로 청일 전쟁 시의 압록강 해전과 항해 해전에서 일본에 의한 패전을 목격한 해역으로 중국 인민과 지도부에게 일종의 “역사적 부담”을 주는 민감한 해역이다. 특히 군사적으로 서해는 중국과 인접된 북방한계선(NLL)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북한 간 수차의 소규모 해전(skirmish)이 발생되었고 한미 해군간 정례적 연합해상훈련이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해역으로 베이징 등 중국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중국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해역이다. 전략적으로 서해는 중국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려는 미국,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려는 일본, 분리독립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대만, 중국이 동아시아 진출의 돌파구인 아세안 그리고 21세기 해양실크로드의 경유지인 인도양과 연결되는 시발점이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제기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ttitude Area Defense: THAAD)의 한국 배치가 서해로 이어지고 서해에 대해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도록 주저하고 한국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던 주된 이유이었다.⁶⁰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정치·군사적 민감성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서해는 한중 간 경제적 교류 및 협력에 의한 물동량이 적극적으로 실시되는 해양이며, 한반도 서해 주요 항구를 출항하는 선박의 약 25% 이상이 중국으로 가는 물동량을 선적하고 있다. 평택항의 경우 컨테이너 선박은 주 1-2회 운항이 5개 선박회사로부터 중국 연안 칭따오, 천진, 다롄, 위하이, 상하이, 닝보, 다산, 샤먼, 홍콩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카페리선이 5개 카페리선박사로부터 영성, 연운, 위하이, 일조 및 이엔타이 항으로 연결되고 있다. 아울러 인천의 경우 위동항운유한공사는 인천-위하이, 인천-칭따오 간 카페리 항로를 통해 한중 전자상거래화물 해상특송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한국 서해 항구로부터 중국 항만으로 연결된 물류들은 내륙 철도와 도로를 통해 몽골, 우루무치, 면양, 자양 등으로 이송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범아시아철도(TAR), 몽골횡단철도(TMGR)과 연계되어 확산될 것이어서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2월 4일자 『중앙일보』는 산둥성, 칭하이성, 헤이룽장성 그리고 후베이성이 한국과의 해·육상 수송 수단 및 물류 순환에 의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산둥성은 한중 지방경제협작구와 칭따오 자유무역구 설립, 칭하이성은 시닝과 인천 간 항공노선 추진, 헤이룽장성은 한국과 해상운수 중심의 프로젝트 발주와 육상 실크로드 동부연장 추진, 후베이성은 우한-한국 간 항공노선 추진 및 합작투자 강화 등이다.⁶¹ 이와 연계되어 약 11,000 km의 중국 횡단철도가 중국 동부 항구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연결되고 있다. 아울러 약 13,000 km의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운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서해만이 아닌 남해 광양항도 광양-상하이-홍콩-선천-폐낭-싱가포르-홍콩-칭따오-부산을 연결하는 신항로 건설을 발표하였으며, 일부는 서해 “열차페리” 개념을 주장하고 있고 최근엔 한중 간 서해 해저터널을 개통하고 철도여객선을 운용하자는 제안들이 서해안 지방

⁶⁰ Sukjoon Yoon, “Are China’s THAAD Fears Justified?” *The Diplomat*, February 20, 2015.

⁶¹ 최형규, “1540 조원 투자 시진핑의 꿈 이다이어리,” 『중앙일보』, 2015년 2월 4일, 14쪽.

자치정부로부터 제기되고 있다.⁶² 이제 서해는 갈등과 분쟁 해역이 아니다. 이미 이는 2010년 3월 서해에서의 북한 잠수함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11월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격사건에도 군사적 충돌로 확산되지 않은 사례에서 증명되고 있다.

특히 서해에서는 중국과 한국 간에 갈등을 모범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 우선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이 적용되는 해양방어 제1도련 이내로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와 달리 해양영유권(territorial disputes)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나,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중첩에 따른 해양경계 획정을 남겨 놓고 있다. 이에 양국은 해양경계 미확정에 따라 발생된 어업문제를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두고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어업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비교적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불법어업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서해에서의 해양환경 오염, 어족 자원 고갈 및 수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어느 일방의 문제로 보지 않고 양자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중국 행정당국의 의지와 조치가 점차 증대되는 등 긍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동해에서의 ‘환동해경제권(East Asia Rim Economic Community)’ 형성이다. 동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에너지 개발 계획을 해·육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매개체이다. 중국 해양강국 추진의 일부인 내륙 실크로드 경제권은 낙후되었으나, 자원이 풍부하고 생산공장이 많은 중국 동북 3성(三省)도 염두에 둔 전략이다. 최근 중국은 훈춘-나진-상하이 컨테이너 활물을 이동시키는 ‘차항출(借港出)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⁶³ 즉 낙후된 동북 3성의 에너지, 자원과 생산품을 북한을 경유하는 대륙 간 철도와 동해를 통해 해양으로는 중국 동부 및 남부 연안 지역으로 연결시키고 철도로는 중국 내륙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확대하겠다는 장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동해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해역으로 서해와 함께 한국과 중국의 일대일로 간을 연결할 수 있는 해양이다. 1990년 중반부터 중국은 동북3성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며, 가능한 동북 3성의 자원과 에너지를 중국 동부 연안 도시로 이송하여 활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훈춘-나진 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이다. 아울러 러시아도 하산-나진 간 철도 개량 및 보수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이 완성되면,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자원을 수입하거나 상품을 수출시키는 물류 환적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0년 초반부터 동해 연안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역발전 차원에서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위한 각종 제안과 협력들이 구축되고 있다. 비록 아직은 학술적 차원에서 주로 연구소, 대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체 기관은 전담기관과 연구소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 러시아 및 몽골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2월 4일자 『중양일보』는 산둥성, 칭하이성, 헤이룽장성 그리고 후베이성이 한국과의 해·육상 수송 수단 및 물류 순환에 의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산둥성은 한중 지방경제협력구와 칭따오 자유무역구 설립, 칭하이성은 시닝과 인천 간 항공노선 추진, 헤이룽장성은 한국과 해상운수 중심의 프로젝트 발주와 육상 실크로드 동부연장 추진, 후베이성은 우한-한국 간 항공노선 추진 및 합작투자 강화 등을 전하고 있다.⁶⁴ 한국 서해 항구를 출항한

⁶² 특별취재팀, “한국 상품실어 나르는 신실크로드 ... 중국 대륙횡단철도,” 『중양일보』, 2015년 5월 13일 1 & 8쪽.

⁶³ 중양일보 JTBC 특별취재팀, ‘평화오디세이 2015: 그 강은 북으로 또 남으로 흘렀다,’ 『중양일보』, 2015년 7월 9일, 7쪽.

⁶⁴ 최형규, “1540 조원 투자 시진핑의 꿈 이다이어리,” 『중양일보』, 2015년 2월 4일, 14쪽.

선박의 약 26%가 중국 동부 항구를 선적지로 항해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되어 약 11,000 km의 중국 횡단철도가 중국 동부 항구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연결되고 있다. 아울러 약 13,000 km의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운용되고 있다.

셋째, 일부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해야 있다. 우선 타당성이다. 중국 동북성 석탄을 나진항으로부터 한국 또는 중국 동부 연안 항구로 이송하는 물류이송 방안에 대한 타당성이 낮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자재 수입항구 개설이 환경오염 및 경비과다 지출로 한국과 중국 간 지방성 정부 모두가 소극적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어서 석탄을 동해를 통해 한국 서해안 및 중국 동부로 이송시키는 방안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성이다. 대부분 석탄 운송은 벌크선을 이용하며, 이는 원자재 이송용으로 회항시는 대부분 공선으로 쌍방향 물류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벌크선은 대형 규모의 선박이다. 이를 동해 석탄 운송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구상에 따라 일부 물류공사들이 중국 석탄을 “컨테이너”에 적재시켜 수입국인 한국과 중국 동부연안 컨테이너 전용항구로 이송하여 하적시키고 있으며, 회항시에 컨테이너에 물류를 운송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회항시 “물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유연성이다. 현재 해운업계는 “해운 비수기”라고 할 정도의 불황을 맞고 있어, 노선 조정, 기항지 재검토, 운송로의 최적화, 컨테이너 회송비 최소화 등을 추진하여 영업이익을 맞추고 있으나, 동해와 서해에서의 해운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⁶⁵ 과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참가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예를 들면 북극해를 이용한 북극해로는 2013년 현대모비스 시험운항 이후 경제적 이유와 물류 부족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⁶⁶

3. 한국의 균형적 대(對)중국정책 필요성

다음으로 동북아 정치·경제 현안의 주도국인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내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대(對)중국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해양에 중심을 둔 대(對)중국 전략”이었다면, 향후는 “내륙과 해양을 동시에 관심을 둔 대(對)중국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 2013년 6월 말 중국 방문 시 한국 삼성(Samsung)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시안(西安)”을 방문한 사례가 이를 증명하였으며, 이를 기점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對)중국 전략 방침이 내륙으로 집중되고 있다.⁶⁷

특히 한국과 중국 간 물류는 중국이 지향한 일대일로 주된 대상 국가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인도양 국가 간 물류와는 성격과 대상이 크게 달라 일부 우려하는 물류 환적, 통관절차의 비효율성, 쌍방향 물류 가능성 및 정부 관리 부패에 따른 제도 불합리성 등이 다소 낮다. 중국 일대일로의 서부지역의 경우 대부분 에너지 등의 자원이 물류순환 체계이나, 한반도 주변지역은 주로 소상품 및 완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양국 물류업체 간 협업체제가 구축되는 경우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서해와

⁶⁵ 2015년 4월 23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개최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주관의 『중국 일대일로와 한중 관계 증진』 좌담회 시 참가자들과의 “개인 인터뷰” 참조.

⁶⁶ 윤석준, “남중국해, 인도양 및 남태평양 해양안보와 취약한 해양협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년-2015년 동아시아 해양안보 현안과 전망』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참조.

⁶⁷ 현재 삼성은 시안에 반도체 공장, 수조우에 가전제품 공장 그리고 하이조우에 이동통신 전화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1일부터 금융결제 방식을 기존의 미국 달러(US dollar) 중심에서 한국 원화(Won)와 중국 인민비(RMB) 직접 결제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Korea Joongang Daily, Tuesday, March 17, 2015, p. 3.

동해를 거쳐야 되는 기존 물류순환 수단이 대규모의 선박, 철도 그리고 차량이어서 고비용에 장시간 경비를 요구하나 대규모 물류를 운송하는 선박 및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간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류순환 전환(modal shift)”이 형성되면, 폭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중국과 한국은 “택배(door-to-door delivery)”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 물류는 소상공을 신속하게 순환시키고 있는 바, 이는 향후 국영기업 성격의 열차와 차량 간 협업에 추가하여 다양한 물류업체 간 협업을 통해 최단 시간의 신속한 물류체계가 구축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⁶⁸

현재 한-중 양국 간 북한의 비핵화,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또는 도입, 한-미-일 군사적 협력을 위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정보교환 구체화 그리고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의 무거운 현안들이 존재하나, 이는 한중 양국 간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없는 요인들이다.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정치 및 군사적 힘의 구현과 영향력 증대가 아닌, 경제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중국과 주변국 간 상호 윈-윈 전략을 근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역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상호보완적 전략적 관계이다. 이러한 특별 관계는 중국 주변국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 보기 어렵다. 현재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 및 성숙화시키고 있으며, 현 시점은 이러한 변화를 중국 주변국들에게 시현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이제 한국은 중국 해양강국 지향에 대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구심”과 “경계”를 참고하여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양강국 함의를 “경시”하거나 동남아시아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관찰적 시각”을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해 그 동안의 서해와 동해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간 해양협력을 지역 해양협력의 모델(modality)로 삼아 중국 해양강국의 한반도 주변 해양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우리의 경제적 이익과 전략적 레버리지를 얻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 간 이익이 한반도에서 충돌한 사건과 같이 한국이 중국의 해양강국 추진 저의와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견제를 받아 들이는 “중간자” 위치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이다.⁶⁹

그 동안 한국은 중국 해양강국 추진에 대한 평가 및 활용 전략 수립과 중국의 아시아기반투자은행(AIIB) 참가 요청에 대해 너무 부정적 입장만을 지향하여 중국에게 “전략적 신뢰(strategic confidence)”를 보내는 호기를 놓치는 실수(失手)를 하였다. 한국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양강국과 일대일로 구상을 국내적 의도 또는 지정학적 영향력 증대로만 간주하거나 동남아시아 등에만 적용되는 주변국 외교 일환으로 무시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될 것이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인민의 공산당에 대한 지지와 공산당이 인민에게 다가간다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과제와 범주에 집착하는 초초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문제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한국이 도와 주어야 한다.

향후 한중 관계는 복합적 요인에 의거 상호보완적 관계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지리적 인접성 또는 연계성”이 손상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일부 표면화된 현안들은 동아시아의 다면적 다층적 안보 및 경제 협력 차원에 의해 무리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2000년 마늘 사건과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성을 갖고 대응해야 하며, 이는 “경계가 해결되면 정치 군사적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한국과 중국 간 각종 통계 자료들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일대일로 지향이 한국에게는 도전이

⁶⁸ 김기환, “상하이서 주문한 삼푸 3일만에 역직구 배송 분초 다툼,” 『중앙일보』, 2015년 6월 1일, B1 쪽.

⁶⁹ Sukjoon Yoon, “Xi Jinping’s visit to South Korea: Finlandisation or Crimeanisation?” *RSIS Commentaries*, No. 142, 16 July 2014.

아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중국이 한국과 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통해 양국 간 난관인 한-미 동맹 증진, 일본과의 역사수정주의 정리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다소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향후 협력이다. 다시 말해 한국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양강국과 일대일로 시발점일 수 있는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의 양국 간 해양협력을 증대시켜 중국에게 힘을 실어주고 한국은 북한을 개방시키고 이를 통해 한국의 자금과 기술 그리고 문화적 동질성을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간 해양갈등 요인이 국가주권 및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과 연계되지는 않았으며, 불법어업 공동관리, 환경보호 및 공동과학조사 등의 부수적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상호이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4. 북한 요인 극복

아울러 북한의 부정적 입장을 극복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을 장애요인으로 간주하기 보다 북한과의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해양으로 가까이 인접된 서해와 동해에서의 중국과 러시아 간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경제협력을 통해 그 동안의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및 성숙화를 위한 결정체(catalyst)로 부각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앞에서 제시한 동해평구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성, 경제성과 유연성 문제를 지리적으로 극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러시아 시베리아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북한이 개방한 나진-선봉 항구와 하산 자유무역지구를 통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언급하였다, 늦게나마 다행이다.⁷⁰

최근 동아대학교 원동욱 교수는 이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의 3단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우선 단기적 방안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중국과 북한 간 추진되고 있는 “훈춘-나진 고속도로 프로젝트”와 한국과 러시아 간 추진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간 상호결합을 통해 중국, 한국 그리고 북한 3개 국가간 물류협력 구도형성 필요성을 제기하며 점진적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였다.⁷¹ 아울러 중소기업연구원 이재호 박사는 최근 발표한 연구논문을 통해 5/24조치와 유엔제재를 극복하고 중국을 통한 우회적 남북중 3국간 경제협력으로 중국 선양에 경제협력센터와 훈춘에 한국 중소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모두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앞에서 제기한 타당성, 경제성 및 유연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과제이다.⁷² 이를 통해 한국은 북한 문제를 극복하고 동해평구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⁷³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를 위해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은 주변국에게 과거의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고 함께 “운명공동체”로 발전하자고 제시하는 상황 하에 한국이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는 불균형적 입장을 보이면 아니 된다. 북한 문제 극복을 위해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 보다 우리

⁷⁰ 신용호 전수진, ‘청와대 통준위 토론회: 박대통령 “북, 대화 의지 비쳐”...나진하산 통한 경협 추진,’ 『중앙일보』, 2015년 7월 11일, 5쪽.

⁷¹ 원동욱, “중국의 일대일로, 유라시아를 향한 그랜드 디자인,” 2015년 5월 29일 개최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주관하의 『제4회 환동해포럼』 발표 논문 참조.

⁷² 김원배, ‘남북중 3각협력: “중국 훈춘에 제2 개성공단 짓자”’ 『중앙일보』, 2015년 7월 13일, 10쪽.

⁷³ Sukjoon Yoon, “Strategic dilemma or great blessing,” *PacNet*, No. 23, April 13, 2015.

정부는 물론 언론과 국민 모두가 북한 문제 해결 인식에 대한 같은 공감대를 같이 갖도록 해야 하며, 이를 해양을 경유한 교류와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분단의 고질적 문제인 내륙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이념 문제 등을 모두를 극복하는 ‘대협상(大協商: Grand bargaining)’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학자와 전문가들 간에 상호 경쟁하기 보다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다행스럽게 “북한이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해양으로 한국과 접할 수 있으며, 중국 및 러시아와 대륙과 접하고 있는 바, 해양아시아 추세에 미국과 함께 해양연맹에 나서는 일본이 중국과 충돌하거나 미국과 중국 간 해양패권 경쟁이 한반도 주변 해양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심에 ‘북한의 변화를 한국 독자적 관점에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 동맹은 미래 전략동맹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그 범위에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도 인정하는 바이다. 문제는 북한이 지금과 같이 해양을 활용한 도발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해양으로 확대시키면 한국에게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동해에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 해상 이격(ejection)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한국 해군의 전력 보강과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⁷⁴ 북한은 해양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게 “왜 북한만 예외인가”하고 반문하며, 앞에서 지적한 해양 아시아를 지향하는 역내 국가들의 무리한 국가정책과 군사전략 어려움과 문제점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VI. 맺는 글

동아시아는 근본적으로 해양을 공간적 매개체로 대륙과 연결된 ‘역사’를 갖고 있으며, 현재의 아시아 부상 구조는 ‘해양협력’이다. 즉 지리적 공간인 해양을 활용하여 대륙에 접목시킴으로써 유럽 등 기타 지역과 비교되는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이루었다는 것이다.⁷⁵ 이런 외중에 전통적 대륙국가 중국이 해양강국을 선언하고 대륙과 해양을 융합시킨 국가전략 일대일로 구상을 역내 국가와 역외 국가들에게 제시하였다. 일부는 이를 아시아와 유럽을 일체화시키는 구상이라고 한다. 한국은 이를 활용하여 유럽으로의 연계성(connection)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즉 우회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동아시아 해양에 대한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대응으로 해양은 평화와 번영의 장(場)이 아닌, 갈등과 대결의 장(場)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이 힘겨운 해양지향적 국가정책과 군사전략을 지향하는 해양 아시아로 귀결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추세가 ‘올바른 선택인가’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는 ‘수평적 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우리에게 해양 아시아가 동북아 해양으로 확대되는 것을 가능한 억제시켜야 함을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북아 해양은 전통적으로 불신과 해양에서의 대결국면에 익숙해 있던 해양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에너지 개발 계획 등으로 해양을 이용한

⁷⁴ Sukjoon Yoon, ‘Expanding the ROKN’s ASW capabilities to deal with North Korean SLBMs.’

⁷⁵ 이는 최근 아프리카 인종 간 갈등과 대량 살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병합사태, 중동에서의 이슬람 국가(IS) 추진에 따른 중동국가 간 갈등 등과 비교시 동아시아가 보다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해양협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 박근혜 정부의 동평구 구상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더불어 선언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는 이를 동해평구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동평구에 대한 주변국으로부터의 반응은 그리 적극이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해평구는 해양 아시아 추세가 동북아 해양으로 확대되는 것을 억제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서해와 동해를 통한 해양협력으로 다루기 힘든 경성안보 등의 추진과제 보다 쉽게 다자간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국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첫째, 서해에서의 한국-중국 경제회랑, 둘째, 동해 환동해경제권, 셋째, 한국의 대(對)중국 균형적 접근과 넷째, 북한에 대한 전향적 접근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미중 간의 해양대결 국면의 동북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러시아 시베리아 에너지 개발 계획과 연계시키는 경제협력을 전제로 전개되고 있다. 즉 경성안보 이슈가 지배적인 동북아 해양을 통한 경제협력에 의해 아시아 패러독스로 정의되는 아시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해평구는 아직은 개념이며, 추진과제로 제시된 내용들은 이미 중국의 일대일로와 같은 지역적 차원의 구상에 대한 반향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시각에서 볼 때 한반도 주변 해양을 군사정치적 매개체로 이용하려는 북한을 설득하고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으로부터 올라오는 해양 아시아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동북아 해양을 평화와 협력의 대표적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구상이다. 그러나 북한이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는 2년 반 차 임기에 들어서고 있으나, 그 동안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하기 위한 결정적 계기를 만들지 못하였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동평구 개념을 해양에 적용시킨 동해평구 개념을 발전시켜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방안과 북한의 스스로의 고사(枯死)를 전제로 한 방안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는 구상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동평구를 이제 해양을 통해 실천 단계로 진입하도록 동해평구 개념을 정립해야 할 시기이며, 이는 우리 외교부가 제시한 동평구 2015의 주된 이슈이다.

제2부

연성이슈 분야에서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동북아 지역해에서 동평구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 | |
|---|------------------------------|
| 1 | 동평구 : 협력적 연성이슈는 있는가 ? |
| 2 | 예상을 통한 동평구 어젠다 설정과 이행방안 |
| 3 | 예상 동평구 이행 어젠다와 협력 방안 |

1. 동평구, 협력적 연성이슈는 있는가 ?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CS (2002)



JAPAN

一个岛国的野



新闻时线

惊心动魄3小时 遭俄舰夹击水炮攻击

当地时间14日，俄罗斯“瓦西里”号驱逐舰在朝鲜半岛东部海域，对日本海上自卫队“高城丸”号驱逐舰进行了水炮攻击。

14:51 抵达 日本12艘军舰拦截 保护的船被撞烂

当地时间14日，俄罗斯“瓦西里”号驱逐舰在朝鲜半岛东部海域，对日本海上自卫队“高城丸”号驱逐舰进行了水炮攻击。日本海上自卫队派出了12艘军舰进行拦截，其中一艘驱逐舰被俄罗斯军舰撞毁。

16:30 警戒 平均三四个日本警官控制一个中国人

当地时间14日，在俄罗斯军舰离开后，日本海上自卫队继续在朝鲜半岛东部海域警戒。据称，日本警官与朝鲜渔民的比例为三比一。

17:30 解捕 体力透支夫妻联系 安全保障担忧

当地时间14日，日本海上自卫队解救了在朝鲜半岛东部海域被俄罗斯军舰扣留的朝鲜渔民。据报道，这对渔民夫妇体力透支，且对安全保障表示担忧。

钓鱼岛 29°23'N 124°45'E

钓鱼岛是位于中国东海大陆架的附属岛屿之一，行政隶属中国台湾省。日本称其为“钓鱼台”，并声称拥有主权。

独岛

独岛是位于日本海的一个无人岛，日本称其为“独岛”，并声称拥有主权。韩国称其为“延坪岛”，并声称拥有主权。

民间保钓记事

2004年10月，中国民间保钓组织“保钓联盟”成立。此后，民间保钓活动日益活跃，多次组织赴钓鱼岛巡航。

2004.10

保钓联盟成立，首次组织赴钓鱼岛巡航。

2005.7

保钓联盟再次组织赴钓鱼岛巡航，遭到日本海上自卫队的拦截。

2006.4

保钓联盟第三次组织赴钓鱼岛巡航，日本海上自卫队再次拦截。

2006.12

保钓联盟第四次组织赴钓鱼岛巡航，日本海上自卫队再次拦截。

2007.7

保钓联盟第五次组织赴钓鱼岛巡航，日本海上自卫队再次拦截。

2007.12

保钓联盟第六次组织赴钓鱼岛巡航，日本海上自卫队再次拦截。

2008.7

保钓联盟第七次组织赴钓鱼岛巡航，日本海上自卫队再次拦截。

2008.12

保钓联盟第八次组织赴钓鱼岛巡航，日本海上自卫队再次拦截。

2009.7

保钓联盟第九次组织赴钓鱼岛巡航，日本海上自卫队再次拦截。

2009.12

保钓联盟第十次组织赴钓鱼岛巡航，日本海上自卫队再次拦截。

南千岛群岛 29°40'N 139°11'E

南千岛群岛是位于日本海的一组岛屿，日本称其为“南千岛群岛”，并声称拥有主权。俄罗斯称其为“北方四岛”，并声称拥有主权。

中国要求日本立即释放“保钓人士”

中国外交部发言人表示，中国要求日本立即释放被扣押的保钓人士，并停止在钓鱼岛海域的军事活动。

日本得罪所有邻居

日本在钓鱼岛海域的军事活动，不仅得罪了中国，也得罪了韩国、俄罗斯等邻国。日本在地区事务中的强硬立场，使其陷入了孤立。

日本不认账，迟早有一天会来“要账”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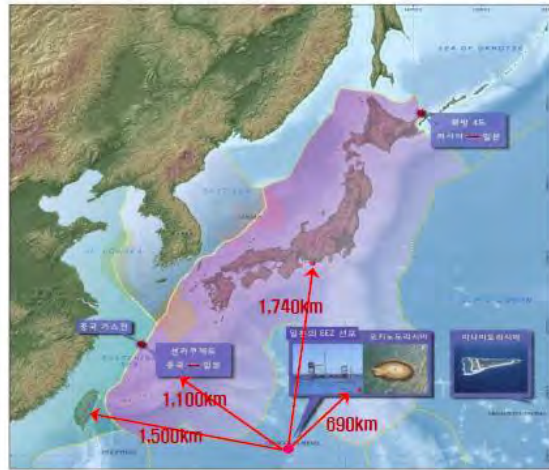
日本在钓鱼岛海域的军事活动，已经引起了国际社会的广泛关注和谴责。日本不承认其在钓鱼岛海域的军事活动，迟早有一天会来“要账”的。



1. 동평구, 협력적 연성이슈는 있는가?



➔ 지역해의 군사안보적 장악력 확대 ↔ 경제성장의 지속화 ↔ 대양진출 및 활동역량 강화를 통한 [군사안보 + 경제]의 확대



6

동아시아 주요 영토 분쟁 지역

중일갈보(2010.11.2)

러·일 분쟁 지역
쿠릴열도 (북방 4개 섬)

중·일 분쟁 지역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중국·베트남 분쟁 지역
시사군도 (영아양-파라셀)

중국·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분쟁 지역
남시군도 (영아양-스피로톨레)

2차대전서 패한 일본이 항복 문서 조인에 앞서 러시아 측에 견제하고 있다. [중앙포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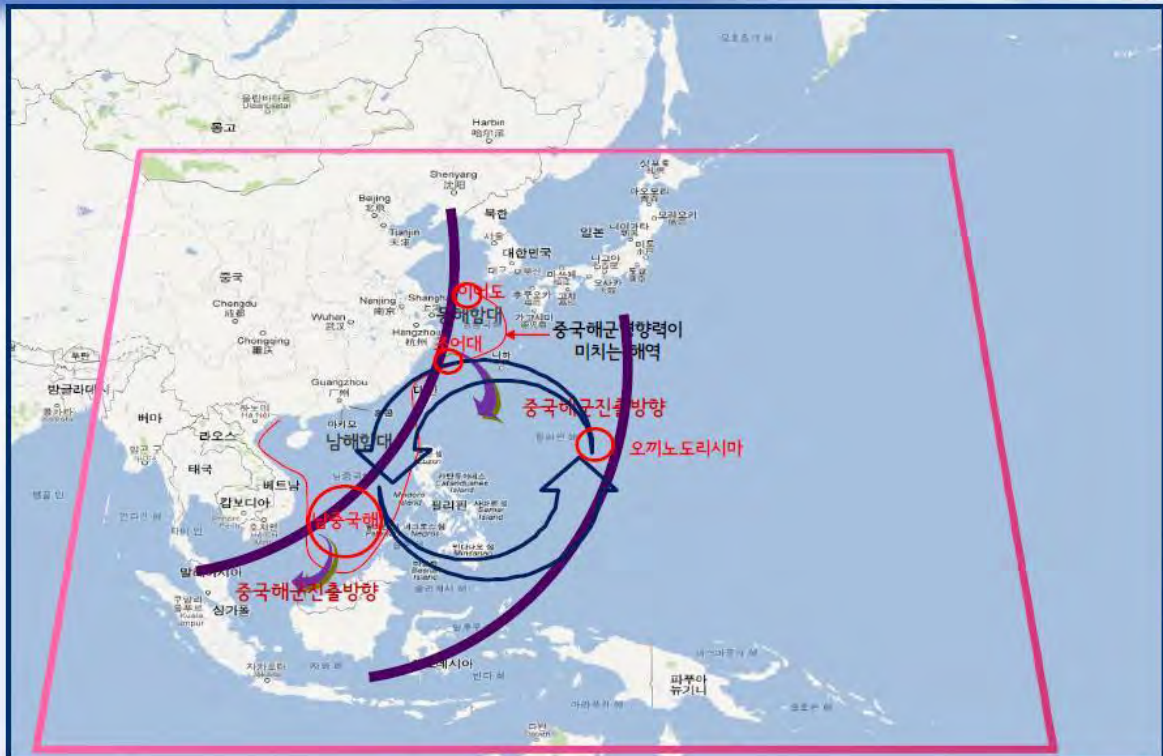
1925년 4월 청일전쟁 이후 치리를 위해 러시아의 이흥준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다. [중앙포토]

일본은 청일전쟁 중 무인도이던 댜오위다오를 1895년 오키나와청에 편입했다고 주장, 중국과 대만은 중일전쟁후 북평중조약인 시모노세키조약 당에 일본에 뺏겼다고 하면서 영유권 갈등 시작. [중앙포토]

1925년 4월 중국 해방군이 시사군도는 중국 영토라는 글이 새겨진 표지에 메인트를 걸고 있다. [중앙포토]

1833~36년 인도차이나 반도를 정복한 프랑스가 차지, 그 뒤 일본이 정복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중국이 반환했다. 현재 중국·필리핀·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가 영유권을 주장 중. [중앙포토]

1. 동평구, 협력적 연성이슈는 있는가 ?



8

1. 동평구, 협력적 연성이슈는 있는가 ?



➔ Asia Paradox : 연성 ? 경성 ?

- 중일의 안보 / 경제 협력 분리/균형 감각
- 지역해 chicken 게임 = 주도권 확보

일본 집단자위권 대표사례

집단지위권
공해상에서 미 함정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응전

자위대 함정 미 함정

그레이존 (무력행사에 미치지 않는 협박사태)
노도 등에서의 불법행위 대처

자위대 해상보안청

미국을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탄도미사일 미국(본토)

일본 이지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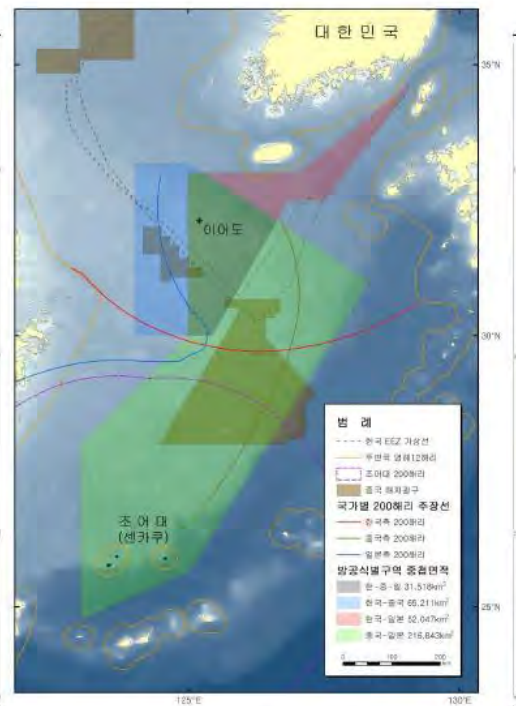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관련
국제평화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외국 부대에 대한 '긴급경호'

자위대 무장정전 습격

경호 국제기관 요원

집단적 자위권 발동 프로세스

상황발생 국가안전보장회의 개회(의장: 총리) 각의 협의 의회 보고 및 승인(사후승인도 가능) 발동



9

1. 동평구, 협력적 연성이슈는 있는가 ?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 (정의) 협력의 관행화를 통한 신뢰 인프라 구축

동평구 협력 추진 영역

- 원자력 안전
- 에너지안보
- 환경 (월경성)
- 사이버스페이스
- 보건
- 마약
- 재난관리

동북아 갈등의 특징

- 국가안보 > 기타의 이슈와 쉽게 연계/영양
- 상위정치와 아워정치의 불균형 심화 국면의 지속
- 경쟁이슈와 연성이슈의 온재(복잡화) - 상호 전환

↑ 상호경쟁/갈등 ▲ ↑ 상호경계의존도

영토주권 + 해양공간 + 도시의 거점화
→ 군사활동 공간 확대
= 중국의 경우, 모든 지역은 경계 + 군사적 책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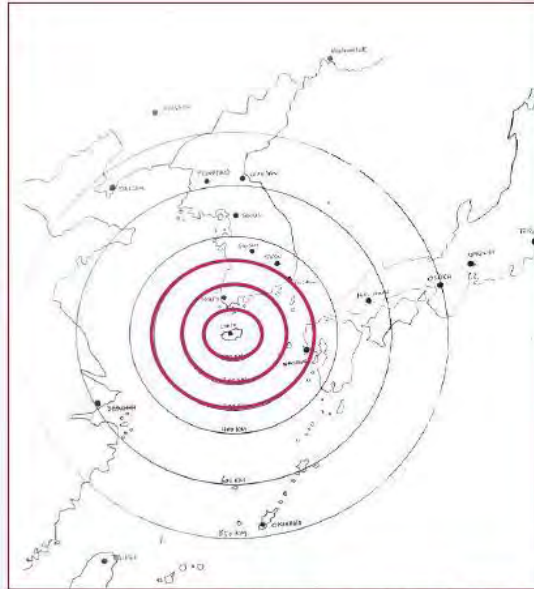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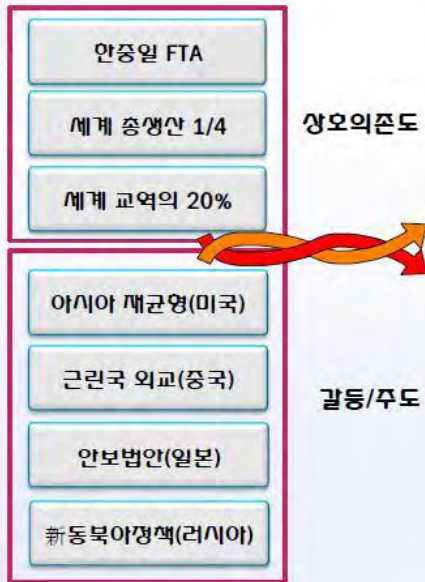


- 1 동북아 갈등 : 협력적 연성이슈는 있는가 ?
- 2 **예상을 통한 동평구 어젠다 설정과 이행방향**
- 3 예상 동평구 이행 어젠다와 협력 방안

2. 해양을 통한 동평구 이행 필요성



→ 경제적 의존도 확대에 따른 국가별 지역(지역간) 주도권 행사 전략



Eugene Knez Papers, National Anthropological Archives, Smithsonian Institution, USA (1946)

2. 해양을 통한 동평구 이행 필요성



→ 지역(내) 협력체계
지역+지역간 협력체계 구축시도

- 지역 경제 통합을 통한 협력
- 경제 + 정치 협력 = 운명공동체
- * Asia paradox의 한계극복 어려움

TPP(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EKN News(2015.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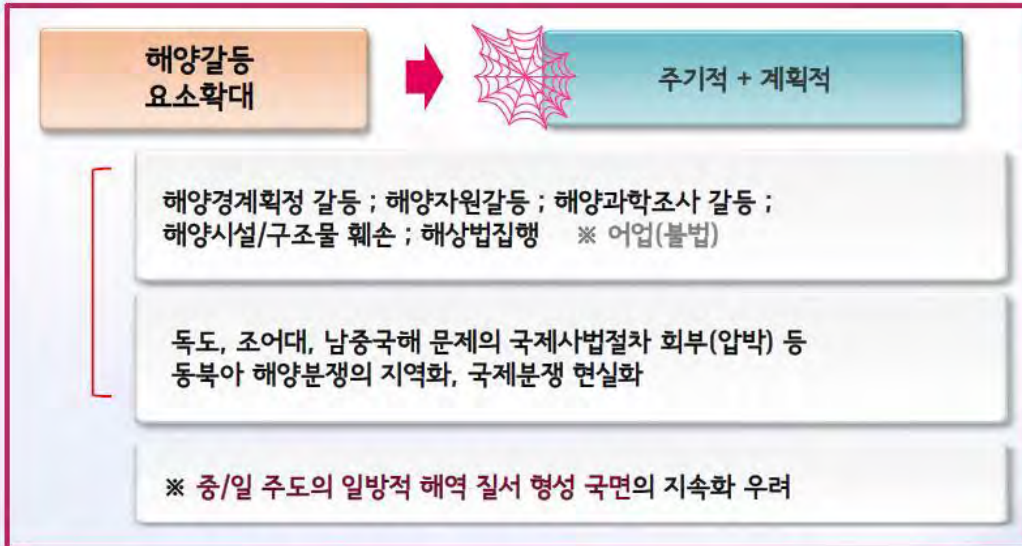
동아일보(2014.07.01)



중국 BBC(2015.0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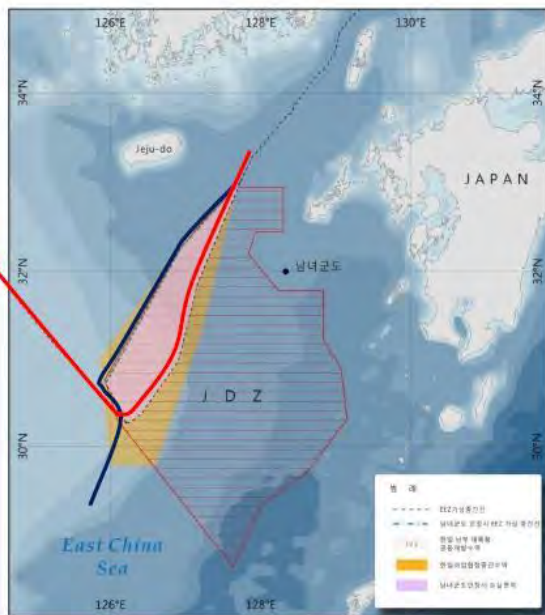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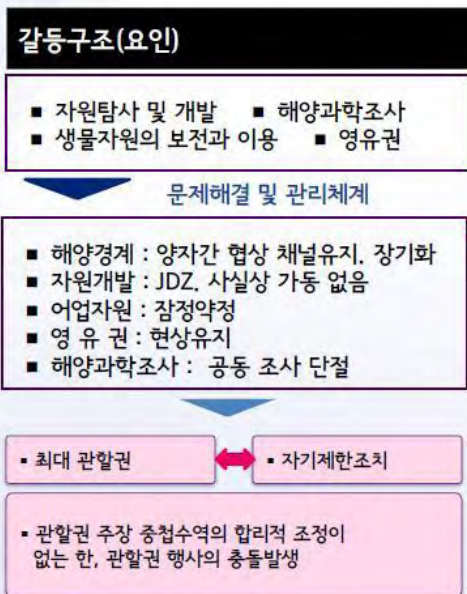
2. 해양을 통한 동평구 이행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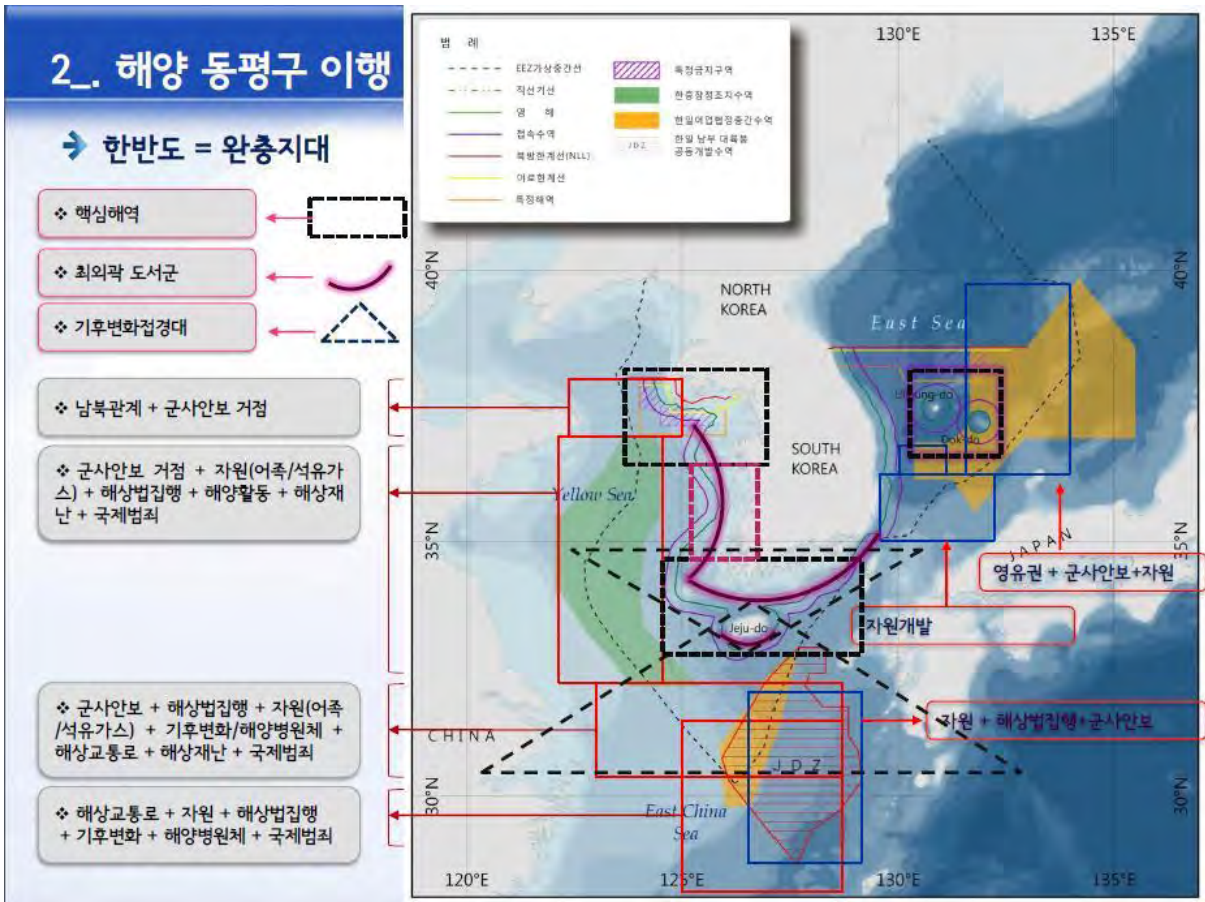
➔ 해양갈등요소 확대와 갈등 주도의 경쟁 상시화는 환경요소로 평가



2. 해양을 통한 동평구 이행 필요성

➔ 동북아 해양분쟁의 지역화 = 세계화 = 해양활동/이용의 평화적 기반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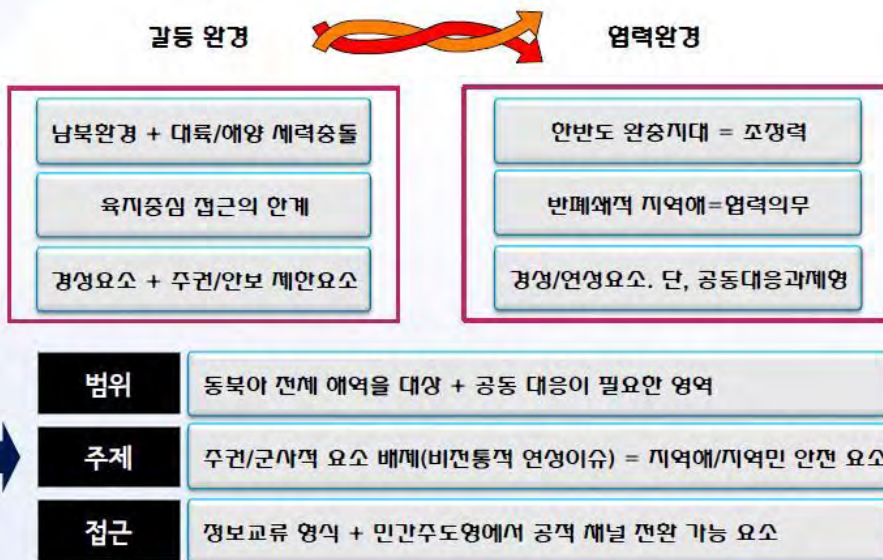




2. 해양 동평구 이행 어젠다 설정 방향

KI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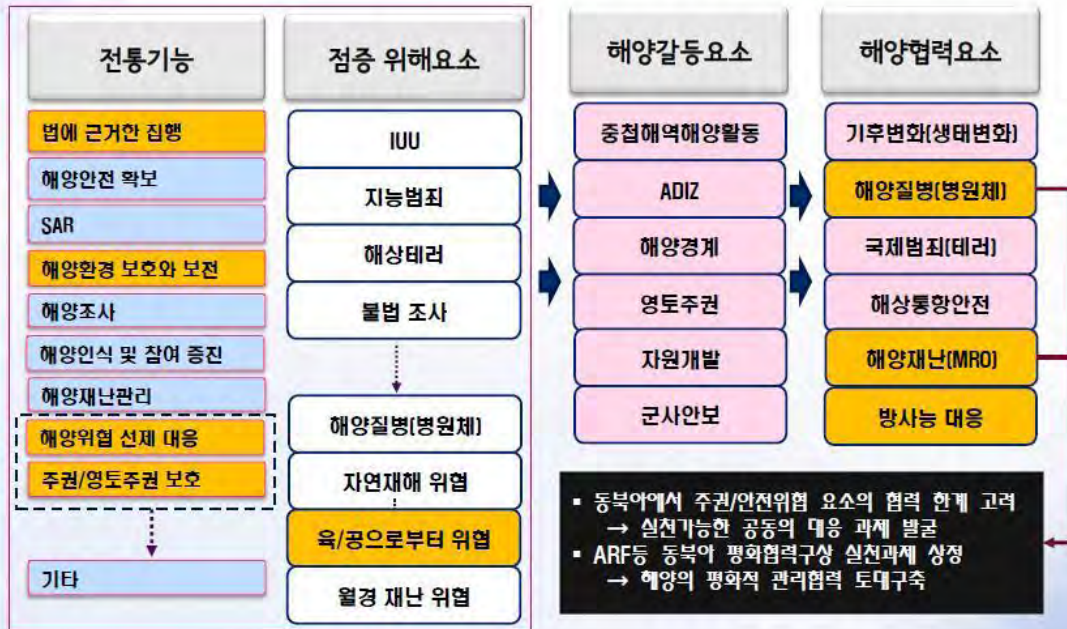
➔ 해양 어젠다를 통한 동평구 이행의 환경적 배경과 설정 방향



2. 해양 동평구 이행 어젠다 설정(현재, 향후)



→ 동북아 해양갈등위협요소 → 해양협력요소 → ARF등 다자간협력협의체 의제 설정



18



- 1 동평구 : 협력적 연성이슈는 있는가 ?
- 2 해양을 통한 동평구 어젠다 설정과 이행방향
- 3 해양 동평구 이행 어젠다와 협력 방안

19

3. 해양 동평구 이행 어젠다와 협력방안



➔ 해양 동평구 이행 우선 추진 의제 및 긴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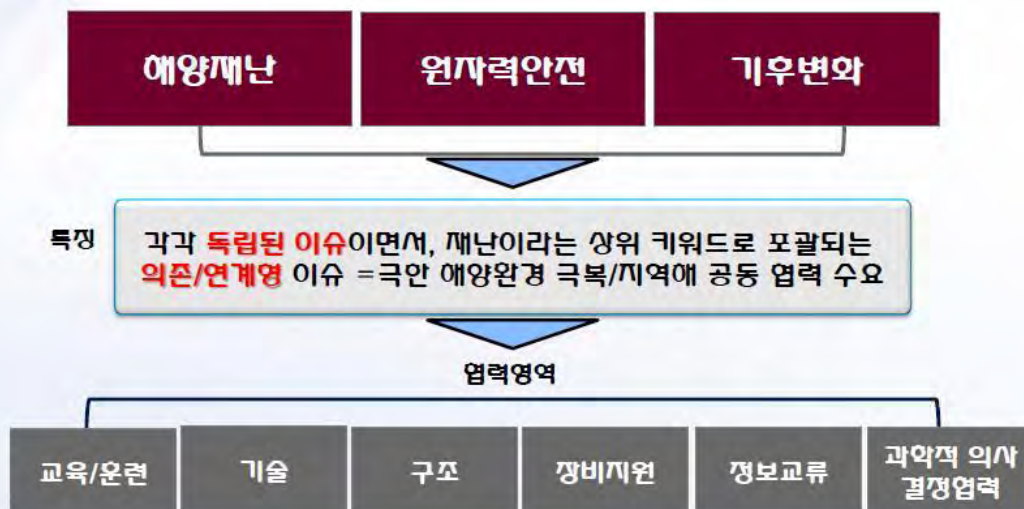
해양재난	자연재난, 인위적(충돌, 좌초, 와재, 폭발 등) 및 자연재해(침식, 전복, 침몰, 해양오염 등) 등의 발생은 다종의 인명 및 지역에 안경에도 직접적 영향 안전한 지역에 염력을 위한 동북아 아역별 재난위험(圖) 작성 + 재난대응염력
원자력안전	쿠시마 원전 방사능사고 및 급증하는 원전 발전소 가동계획 등, 사고발생시 지역에 내 제반 거동(學動) 및 인간 생활상(生活相)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 안전위험을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 하기 위한 기술개발염력, 사고시 정보교류 및 대응기술공조염력 염력기반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위험, 해양자원군(群)의 분포변화 + 새로운 해양질병의 유입 등의 문제에 노출 지역에(기후대) 순환 및 생태적 변화환경에 대한 정보교류와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메커니즘 규명염력

20

3. 해양 동평구 이행 어젠다와 협력방안



➔ 해양 동평구 이행 의제는 독자적이면서 상호 의존영 이슈



21

3_ 해양 동평구 이행 어젠다와 협력방안(1) : 해양재난



➔ 논의 현황 및 실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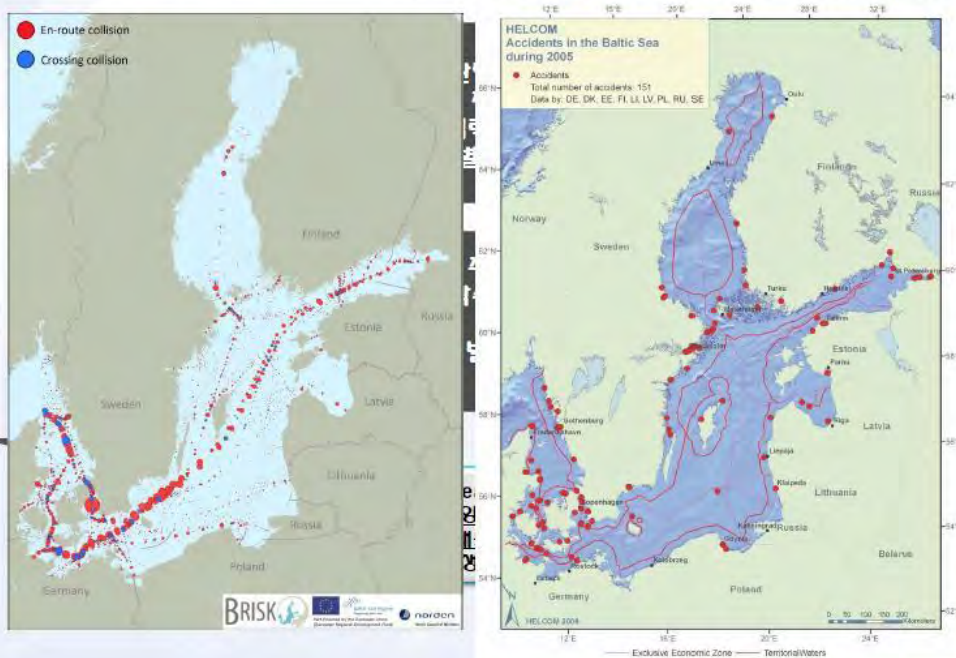
논의 현황	<p>안중일 재난구조도상운련*, ARF DiREx** 등 정기적 협력필요성과 협력 체계의 기반은 구축된 상태임</p> <p>* Trilateral Table Top Exercise(TTX): 3국협력사무국(2011.9출범) ** Disaster Relief Exercise(재난구조운련): 2009년 이후 격년 실시</p>
실현 가능성	<p>동북아 지역에서의 해양재난위험도 작성과 해양재난대응 및 인명구조를 위한 'Partnership - Planning - Practice' 영 지역에 국가의 정기적 정보교류 → 협의체구축 → 재난지위 및 역할부여 확대 가능</p>

3_ 해양 동평구 이행 어젠다와 협력방안(1) : 해양재난



➔ 한계 및 접근 방법

* Baltic Sea에서 선박충돌유형/05년 선박사고 지점(예)



3_ 해양 동평구 이행 어젠다와 협력방안(2) : 원자력 안전



→ 논의 현황 및 실현 가능성

<p>논의 현황</p>	<p>안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 안중/안일원자력 분야 극장급 비공식협의 개최 등 정부차원의 협력 채널 가동</p> <p>* Top Regulators 'Meeting : 안중일 협의체(2008), 매년 순의 개최</p>
<p>실현 가능성</p>	<p>안중 해양기관 간(KIOST, FIO) 역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시스템개발 협력 연구 실행 등, <u>해양방사능 거동 예측시스템 구축 협력</u> → 통합된 해양방사능사고대응 지원시스템 구축 → 동북아 지역에 차원의 《(가칭)Espoo 협약》*의 단계적 이행환경 구축 가능</p> <p>* Conven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 Transboundary Context : 1991년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UNECE)의 주도로 체결, “중대안 국경을 넘는 악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계획성 있는 행위에 대하여 ... 가능한 안 빨리 통지” 아도록 명시.</p>

24

3_ 해양 동평구 이행 어젠다와 협력방안(2) : 원자력 안전



→ 한계 및 접근 방법

<p>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력 안전은 경성이슈이면서 연성이슈일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가짐 원자력 안전은 국가안보, 경제안보, 환경안전, 인간건강안전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p>접근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력 안전은 안보와 안전 중 (건강/환경)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 해양방사능 거동예측 모델링('15- ' 17) 구축과 연계된 안중 전문가 협의체 구축('15) → 안중 비상협력체계 구축 논의 및 안중일 협력체계의 확장 방안 논의 원자력안전 3자간 협력의제 도출 및 연구 착수

25

3_ 해양 동평구 이행 어젠다와 협력방안(3) : 기후변화 KIOST

➔ 논의 현황 및 실현 가능성

논의 현황	동북아 월경성 대기오염분야 협력 라운드테이블(2014.4), 제19차 동북아 환경협력계획(NEASPEC) 등 일반적 기후변화 의제의 상시적 논의, 협의체 가동 중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동평구의 주요 의제의 틀을 활용하거나 NOWPAP(북서태평양실천계획), YSLME(왕해광역해양생태계사업) 등의 논의 의제 확대, <u>해양생태계</u> 난염 및 해양질병영 이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에 공동의제로 특화된 정보교류(지역 DB) → 지역협력체 → 공동연구 및 지역대응센터로 이행 가능 기후변화 영역은 전지구적 논제로 확대보다는 지역적 공동 대응이 가능하고, 정보공유가 가능한 특정 영역 중심으로 접근(접근성 수월)

3_ 해양 동평구 이행 어젠다와 협력방안(3) : 기후변화 KI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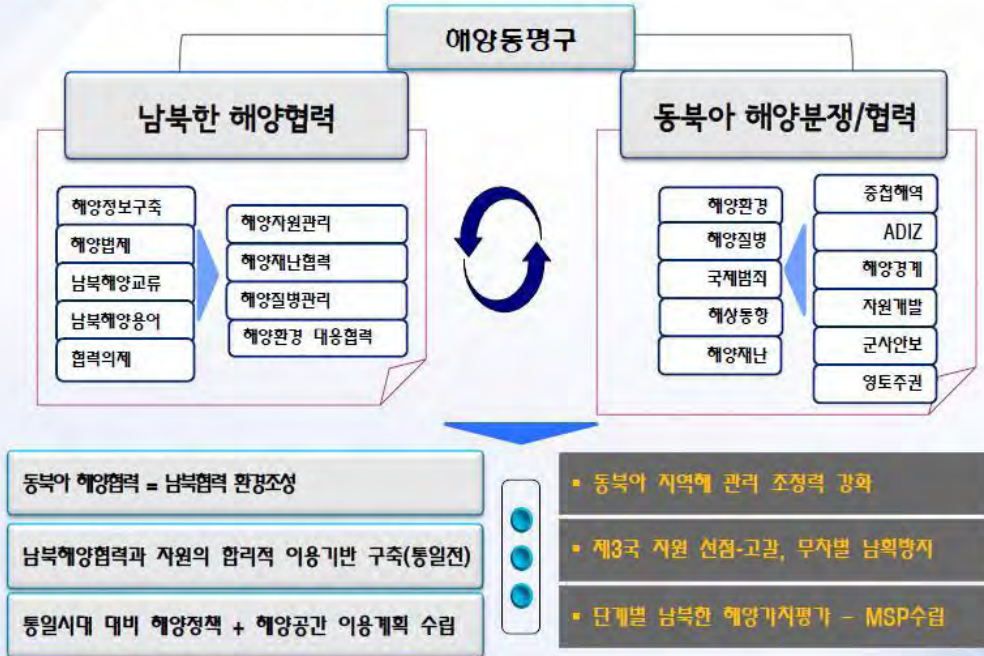
➔ 안계 및 접근 방법

안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병원체의 위생성과 자원가치성 = 정보공유와 접근 안계 (1) 해양생태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위요소에 대한 대응적 측면 (2) 나고야의정서는 병원체 자원을 의정서 대상 범위에 포함 = 고유 생물자원의 국가 자산화 가능 = 국가경쟁력 제고 대상
접근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에 따른 동남아-동북아 지역의 수산물 분포와 해양병원체의 유해성 대응을 중심으로 접근 * 해양병원체의 이용 및 활용가치에 대비, 병원체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변종과 고위험, 및 난해양 병원체 등의 자원 연장을 파악함과 동시에, 고품질의 병원체 자원화를 위한 진단과 예찰시스템을 지역적, 세계적 범위로 확대 기후변화에 따른 동북아 지역별 해양환경 변화 예측 공동연구 도출, 해양질병영 이슈에 관한 기후대별(대만,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 (+)필리핀) 정보협력(교류) 주도기관 선정

3. 해양 동평구의 이행과 남북협력 환경 조성



→ 해양 동평구와 남북협력 접근의 상호관계



28

*Feel the Ocean,
Fill the Future*

감사합니다



동북아 해양재난 협력방안:
후쿠시마 및 북서태평양 해양 방사능 대응을 중심으로

정경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5 제2차 해양포럼

**동북아 해양 재난 협력 방안:
후쿠시마 및 북서태평양 해양방사능
대응을 중심으로**

7. 24, 2015

정 경 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방사능연구센터**



발표순서

1. 서언
2.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양방사능 관련 국제 협력
3. 해양 재난 대응 국제협력 방안
4. 결론 및 제언



1. 서언 – 동북아 평화구상에서 해양재난이 갖는 의미

- 해양재난은 동북아 지역에 공동 대응이 필요한 의제로서, 동북아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의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 실천계획 마련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슈
- 특히 **대규모 해양재난**에 **민관네트워크를 통해 공동 대응** 하므로써 **각 국가별로 국민안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은 물론, **동북아 국가 간의 신뢰 확보**, 나아가 **동북아 갈등 해소**에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



1. 서언 - 발생 특성에 따른 해양 재난 구분

- **단기적 발생 특성의 해양재난:** 태풍 및 쓰나미로 인한 침수 범람·연안시설 파괴, 방사능 오염, 해양 쓰레기, 적조 및 녹조, 선박 침몰 사고, 기름·유해독성물질 유출 사고, 화산폭발에 따른 대규모 화산재 침적 등 외에 다수
- **장기적 발생 특성의 해양재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파랑 처오름 높이 (Wave run-up)와 월파 증가, 수온과 염분 변화, 이와 관련된 해양순환구조 변화, 해양 산성화, 해양 생물종 변화 및 다양성 감소, 수산자원 감소 및 연안침식 가속화 등



1. 서 언 - 동북아 민관네트워크 구축의 주요 대상

단기적 발생 특성의 해양재난 중 각 국의 해양경계를 가로 질러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난들이 유력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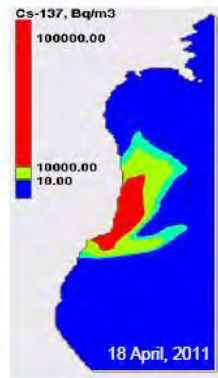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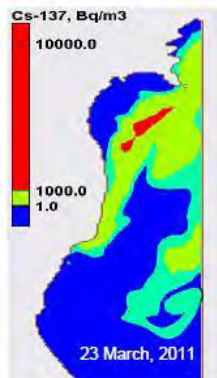
- 수퍼쓰나미 전파로 인한 침수 범람·연안구조물 파괴
- 대규모 방사능 및 해양쓰레기 유출
- 대규모 기름·독성유해물질 유출 (표층 및 심층 유출 사고)
- 대규모 화산폭발에 따른 해양환경에의 충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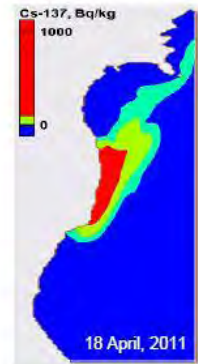
2.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양 방사능 관련 국제 협력

후쿠시마 유출 방사능의 초기 거동 예측 결과 발표
 (독일 KIT, 우크라이나 IMMSP, KIOST 공동으로 학술대회발표)

¹³⁷Cs 해수 중 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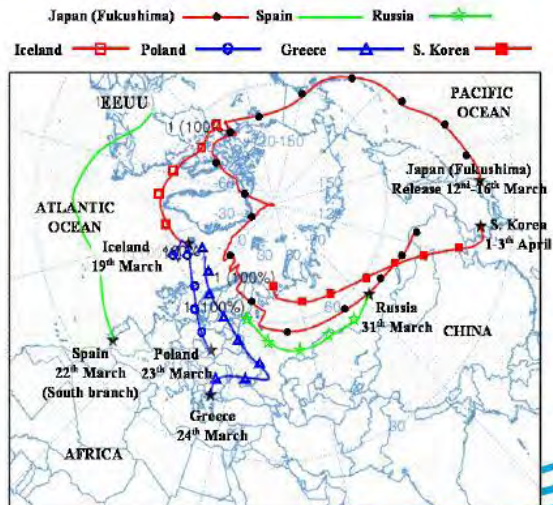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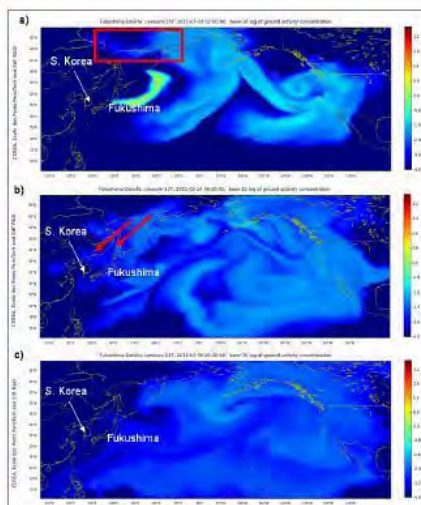


¹³⁷Cs 해저면 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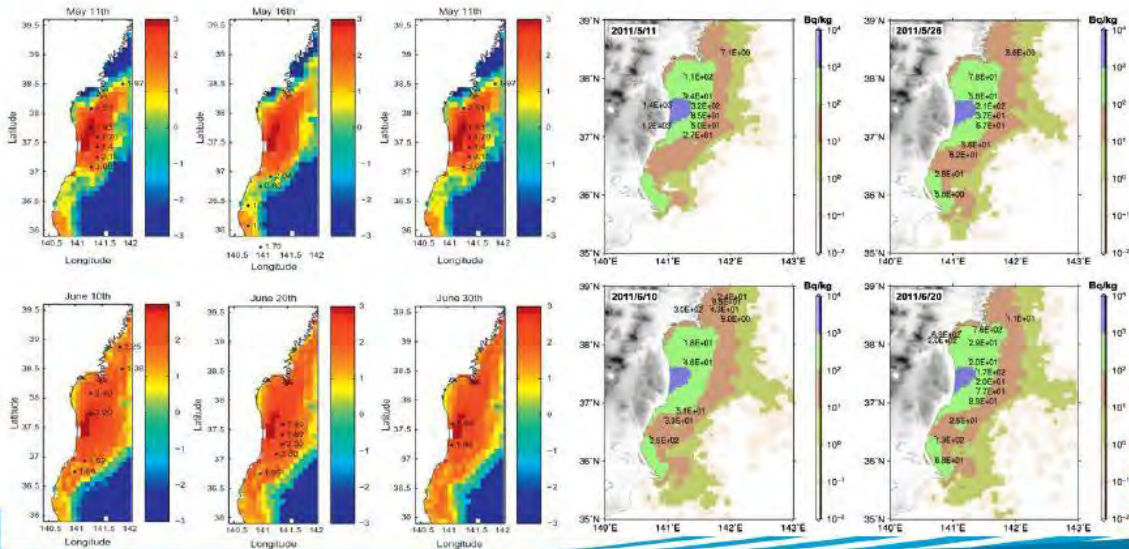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양 방사능 관련 국제 협력

후쿠시마 유출 방사능의 초기 국내 도달 경로 규명
 (스페인 Huelva 대학과 KIOST 공동으로 논문 발표)



2.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양 방사능 관련 국제 협력

후쿠시마 유출 방사능의 초기 거동 (해저면 분포 중심)
 (스페인 Seville 대학교와 KAERI 공동으로 논문 발표)



2.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양 방사능 관련 국제 협력

일본학술회의 주관 후쿠시마 방사능 모델 비교프로그램 참여
 (일본 5, 프랑스 2, 미국, 독일 각 1, 한국/우크라이나 1)

日本学術会議
 Science Council of Japan
 7-22-34 Reppongi, Minato-ku, Tokyo 106-8555

SCJ 초청장

September 11, 2012

Dear Colleagues:

It is our pleasure to inform you that the Science Council of Japan (SCJ) has started to review the modeling capability of the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to the environment as a result of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The purpose of this initiative is to compare existing model results in order to assess the uncertainties in the results, as this will be an important consideration when evaluating the various applications to the mitigation measures. In this regard, we would like to request that you and your colleagues contribute to the comparison of the models by collecting and comparing the relevant results. We will send details of the design of the intercomparison, as well as the format and data policy for data sharing, to those persons/groups who express an interest in participating. The final report will be issued in March 2013 by the SCJ committee along with a list of participants.

We express our gratitude in advance for your kind help and for contributing to this initiative. Please feel free to forward this letter to your colleagues.

Sincerely yours,

Tokuichi Shibata

Tokuichi Shibata, Chair, Subcommittee to Review the Investigation on Environmental Contamination Caused by the Nuclear Accident, Committee on Comprehensive Synthetic Engineering, SCJ

Tsuyuki Nakajima

Tsuyuki Nakajima, Chair, Working group for model intercomparison

최종보고서 (2014.9)

A review of the model comparison of transportation and deposi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to the environment as a result of the Tokyo Electric Power Company's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참여기관

Model	Dispersion model type
CRIEPI	Euler
GEOMAR	Lagrangian
IRSN	Euler
JAEA	Euler
JCOPET	Euler
KIOSI/IMMSP	Euler
MSSG	Lagrangian
NIES	Euler
WHOI	Lagrangian

September 2, 2014

Sectional Committee on Nuclear Accident
 Committee on Comprehensive Synthetic Engineering, Science Council of Japan

KYOTO U. 추가

2.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양 방사능 관련 국제협력

2011.5.22 한중일 정상외교장관의 선언문을 기초로 “**Cooperative Nuclear Safety Initiative of Japan, China & Korea**” 마련.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 (당시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2011. 12월부터 “**한중 핵안전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및 예측시스템 개발 협력**” 과제를 진행. 한중 정부에서 각 1억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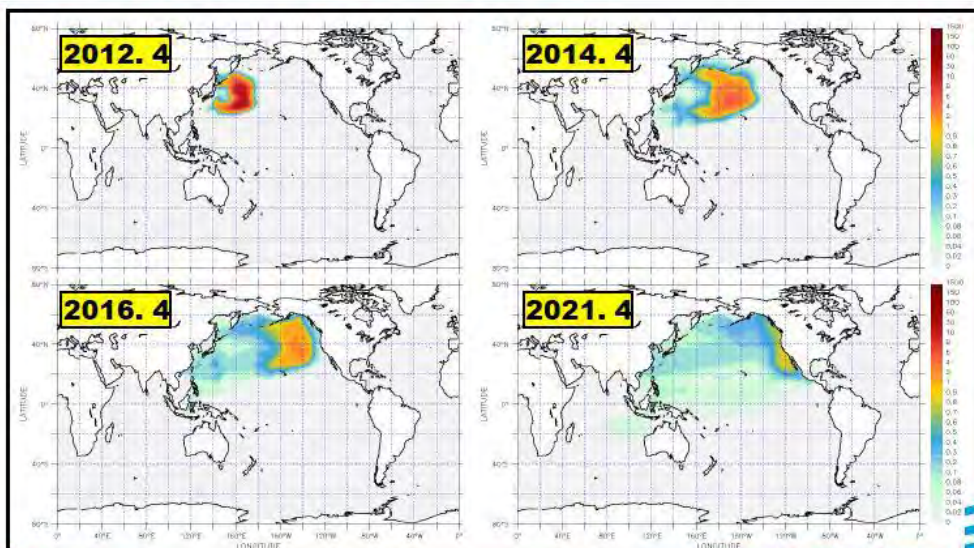
주요 협력 내용

- 대양방사능 관련 활동 정보 교환
- 첨단 해양방사능 거동 및 해양생물영향 예측 모델 개발 협력
- 인력 양성
- 현재 2단계 1차년도 진행 중.
- **한중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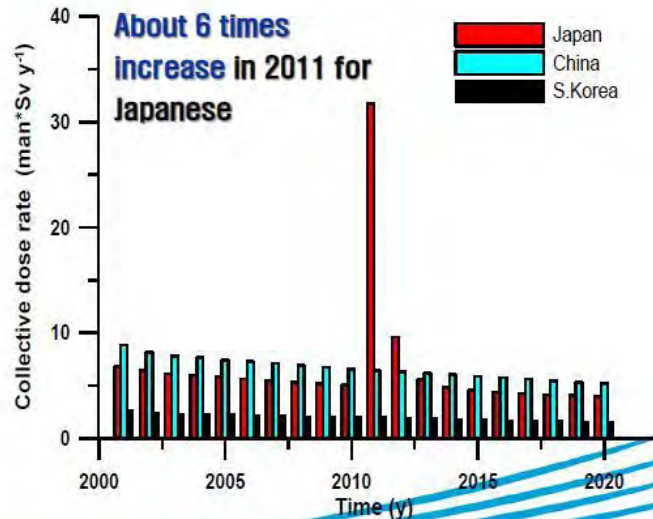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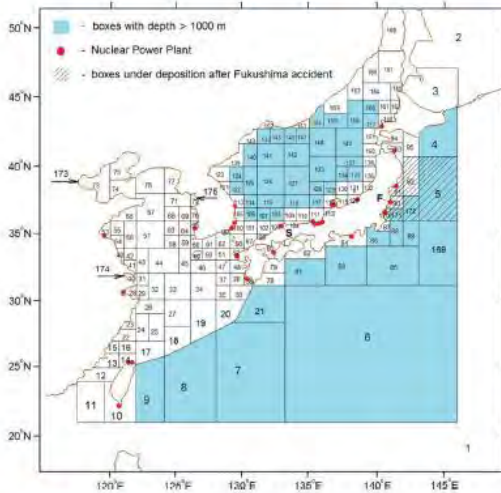
2.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양 방사능 관련 국제협력

후쿠시마 유출 방사능의 장기 거동
(중국 FIO와 KIOST 공동으로 논문 발표)



2.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양 방사능 관련 국제협력

수산물 섭취에 따른 후쿠시마 전후의 선량변화
 (우크라이나 IMMSP, 중국 FIO, KIOST 공동으로 논문 발표)



2.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양방사능 관련 국제협력 - 기타

- 국제기구 활동을 통한 정보 교환 및 모델 비교 협력
 - IAEA MODARIA Project 의 일부로서 워킹그룹 WG8, WG10에서 활동,
 - 북서태평양해양과학기구 (PICES) 워킹그룹 WG30에서 활동
 - 상기 활동에 참여한 동북아 전문가간에는 네트워크 구성에 공감

국제 협력 성과 요약

- 개인별 네트워크를 통해 양호한 협력 진행. 단, 소극적 수준
- 가장 중요한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관련 동북아 국가간의 협력은 부재

3. 해양 재난 대응 국제협력 방안 – 일본 설명회 결과

- 지난 7.13일 일본 게이오 대에서 동평구 설명 및 토론회 개최
 - 외교부, 주일본대사 관계자, 세종연구소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현황과 향후 과제 관련 발표들]
 - 이세열(원자력안전기술원), 일본측 주토론자(마사히로, 핵물질관리센터)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 구현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전략 발표]
 - 정경태(KIOST), 일본측 주토론자(우메야마, risk management 전문가)
[해양재난관리 민관네트워크 구축 전략]
- 설명회 결과
 - 원자력안전 협의체 구축: 필요성 많이 공감하나 **실효성에 의문 제기**
 - 해양재난협의체 구축: **필요성 및 실효성에 모두 공감**

3. 해양 재난 대응 국제협력 방안 – 해양 방사능 관련 우선 검토 사항

- 참여 협력국가 제한 가능성에 따른 문제점 검토
 - 해양 방사능만 고려시 **몽골 배제**
 - 필요시 **방사능 재난** (육상, 대기 및 해양 방사능)으로 확대 필요
- 협력체의 기능/역할 범위 결정
 -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대형 유출사고 발생시 **EEZ 내 신속한 공동 조사를 주도하는 기능 부여 검토**
 - 해양방사능 관련 예측 모델링 외에 쓰나미 모델링, 포함 검토
 - 복원 기술 개발 및 지원 기능 검토
 - 기타 각종 지원기능
- 각 국가별 주 참여 기관들 선정 및 공동 기획

4. 결론 및 제언 – 대상 재난의 집중화 필요



- 동북아평화구상에서 **재난 분야의 범위 대폭 축소 필요**
- **해양 재난도 집중화 필요. 단계적으로 확장 검토**

4. 결론 및 제언 – 협력체의 수준 결정 필요

- **소극적 수준 (즉, 사고 정보 교환, 교육, 대응 가이드라인 작성)의 경우 NOWPAP (북서태평양양보전실천계획) 벤치마킹 가능**
-소규모 coordinating office + 각 국가 지역센터 (4개)



4. 결론 및 제언 – 협력체 수준에 대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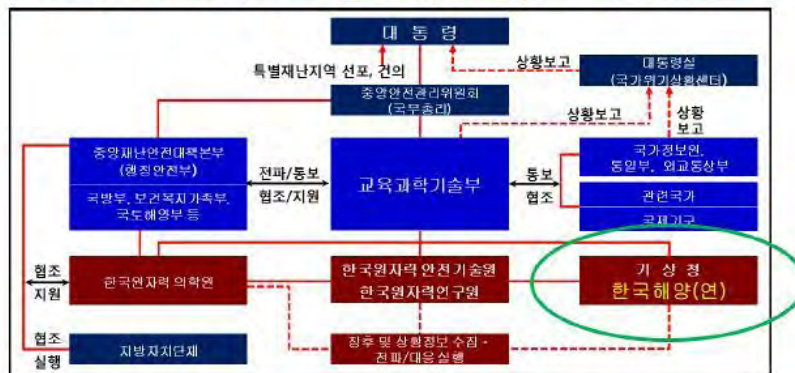
- 소극적 수준의 협력체는 대규모 사고 발생시 실효성 의문



- 적극적 수준의 협력체 필요.
 - 소극적 역할 외에 대규모 방사능 유출시 사고 발생 국가 EEZ 내에서의 신속한 공동조사 허용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나아가 기술개발 R&D 및 인력 양성 역할 수행 필요. 이를 통해 동북아 평화구상에 실질적 기여

4. 결론 및 제언 – 국내 대응 협력체계의 문제점

교과부 인접국가 원자력사고 대응 매뉴얼상의 대응 체계도 (20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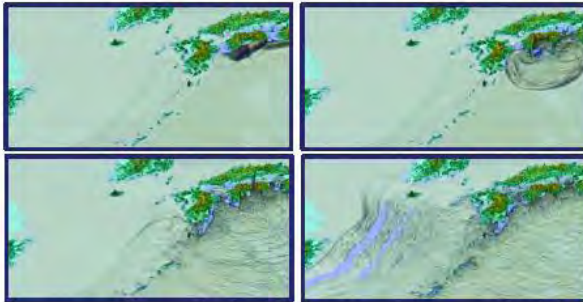


- 상기 체계도는 소규모 방사능 유출사고에 적합
 - 대규모 유출사고시 모니터링이 중요
- 동북아 협력체계 추진시 관련 기관간의 역할 재정립 필요

4. 결론 및 제언 – 대응체제 확립의 기회로

- 후쿠시마 사고 이후 더 이상 **불가능한 재난은 없다.**
-인위적 요인 및 자연적 요인 (예로 쓰나미)으로 발생 가능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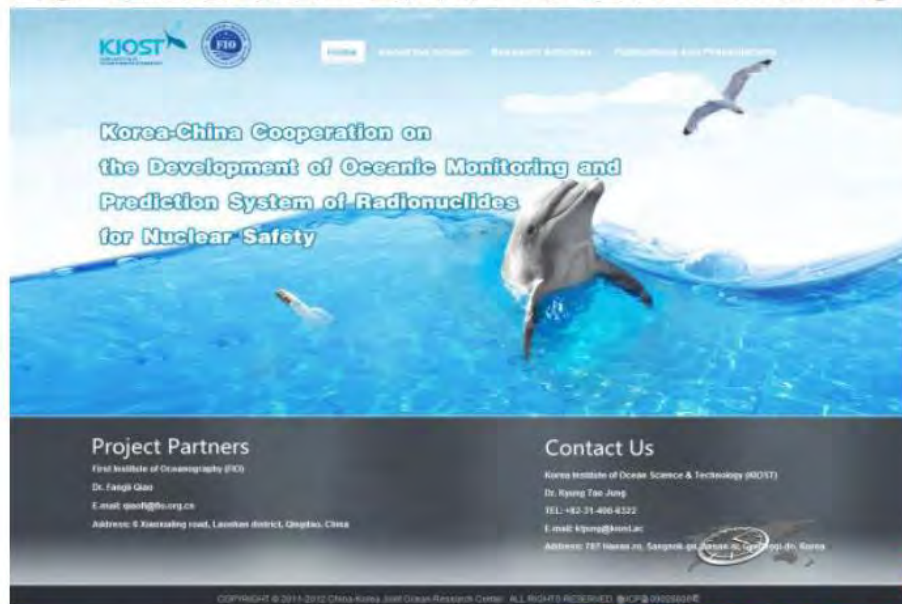
일본 난카이 해구 대형지진발생시 지진해일 전파 (KIOST와 성균관대 공동으로 논문 발표)



- 대형 방사능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국내외 역량이 총 결집된 대응체제 확립 및 인력양성의 기회**로의 활용일 요구됨

참고자료

한중 핵안전 협력연구 홈페이지 초기화면 (www.mrcor.org)





공동 주최

한국해양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후원

외교부